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 성명서

전국 시·도지사는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국가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되므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전면 영유아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12년에 비해 약 1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전국 시·도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와 사회양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로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보육비 국비분담비율을 20% 상향조정하는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2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3. 2. 21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김관용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부산광역시시장	허남식	대구광역시시장	김범일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	대전광역시시장	염홍철
울산광역시시장	박명우	세종특별자치시장	유한식	경기도지사	김문수
강원도지사	최문순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 2013년 봄호 월간 48호 | 2013년 3월 22일 발행 | 등록번호 서울동국 00389 | www.gaok.or.kr

시·도 뉴스레터

Vol. 46

2013. Spring

집중조명 |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시도지사코너 | 유한식 시장, 박명우 시장, 염홍철 시장, 강운태 시장

시책 소개 |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시도 기행 | 강원도

국제화 현장 | 창원시

국제화지원정보 | 지방의 국제화 컨설팅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세종!



04 집중조명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이제는 헌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지방자치체
홍정선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방 경쟁력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과제
이재원 |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4 시도지사코너

유한식 시장
'평등 세종시' 지역균형개발 위해 5개 권역별 전략 추진
박행우 시장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울산광역시
염홍철 시장
집사관의 2013년 대안이 달라지는 12가지 이야기
강운태 시장
상성으로 도약하는 2013년 금포면도시 광주를 말한다



30 시책 소개

경기도, 2012년을 이렇게 달려왔다!
충청북도, 웃음이 넘쳐나는 행복한 경로당으로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충청남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선도

42 시도 가행

과거와 현재가 상존하는 공간!
전혀 뜻밖의 유산, 강원도 DMZ 가행

46 정책연구

국비비율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
법령에 의한 지치권 제약의 현황과 문제

50 협의회와 함께하는
국제화 현장

UCLG 이사회 도시 청원시,
세계지방정부들 주도하다

52 지방정부 소식

지방정부 주요 행사 및 국제교류 소식 소개

60 월드리포트

중국, 고속철로 달린다

64 협의회 동정

전국시도지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방문 간담회
전국시도지사,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방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3 지자체 국제관계관 연찬회 개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대학생 SNS 홍보단 1기 발대식 개최



cover story

단일행정 중 으뜸이라 불리는 충북 단양의 토박이
본. 무은 남편과 함께 그 가운데 우뚝 선 기업가로서
아우터에 있는 모습은 가히 열광적이다. 곧 정부의 지
시에서 자라나고 있는 수직에는 누가 봐도 열정을
것을. 따뜻한 사람, 자연을 벗삼아 놓인 것들을
들이 마음속에서 울림을 울려준다.

66 국제화지원정보

국제교류 번지수 찾기 프로젝트
"지방의 국제화 컨설팅"

68 생활 속 건강

봄 내음 가득한 우리고장 특산물
김경민 | 푸드스타일리스트

72 여행 스케치

문심(文心)의 땅 해남
하민 | 시인

76 영화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한마디

Forrest Gump(1994)

발행일 2013년 3월 22일(통권 46호) | 발행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관용
등록번호 서울증-제 0038 | 주소 서울시 용구 을지로 23
편집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이종원
편집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기획홍보부 | 전화 02-2171-2353
팩스 02-2171-2376 | 디자인 |유니크비즈(02-2272-5353)

시라 뉴스레터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발행합니다. www.pook.or.kr
등록번호 서울증-제 0038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지난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새 정부의 가치는 무엇보다 민생과 현장 그리고 약속의 정치로 국민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이다. 국민들 역시 각박한 삶에 지친 서민과 중산층에게 희망을 주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국정철학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방분권개헌 및 지방 정부 국정참여 분야와 지방행정 및 재정분야에 대해 새정부의 국정 방향을 가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제는 헌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홍정선 연세대 교수

지방 경쟁력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과제

이재원 부경대 교수



이제는 헌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을 핵심 구호로 하는 새 정부가 선택한 국정과제인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자치는 성공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지방자치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문제해결의 한 방법으로 자치사무의 범위, 지방재정의 보장, 자치입법권의 확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새로운 헌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글 홍정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

1. 국민의 소리를 보다 겸허하게 들어야 할텐데 ...

지난 2월 25일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과 더불어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을 핵심 구호로 하는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아울러 새 정부가 계획하는 바가 차질 없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진정으로 바란다. 새 정부 역시 모든 국민의 정부이기 때문에 실패하여서는 아니 된다. 새 정부의 실패는 국민의 실패가 되고 새 정부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성공은 국민들의 힘이 결집될 때 가능할 것이다. 국민들의 힘의 결집을 위해 새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선거철만 지나가면 국민의 목소리가 먼 산에서 들려오는 메아리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누구보다도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보다 민감한 사람들이라 할, 권력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겸허해지고 더 겸손해져야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더 바르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권력에서 멀리멀리 떨어져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지방자치의 기틀 확립

〈박근혜정부 국제 과제 중〉

과거 정부의 미흡했던 제도의 틀과 정책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실천의지 표명

자치사무의 개념 확립

지방자치 구성의 핵심 개념 정립



지자체의 자치사무와 중앙정부의 기관위임사무 구분

2. 지방자치, 제대로 된 틀을 갖추어야 하는데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13년 2월 「보도 참고자료 2」로 발표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국정과제」라는 자료를 보면,

Ⅱ. 국정과제 추진계획, 국정목표 4-안전과 통합의 사회, 추진전략 18,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의 목차 다음에 국정과제로서(112)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113) 지방대학 지원 확대, (114)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115)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116) 지역 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라는 항목이 보인다. 이것은 새 정부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하에서 지방자치에 초점을 맞추어 약간의 생각을 적어본다.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시점부터 계산한다면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0여 년이 지났다. 각 정권마다 지방자치 한다고 했지만, '지방자치가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라고 물을 때,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각 정권에서 세를 누렸던 사람을 제외한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 부정적인 시각이 보다 많은 것이 아닐까. 필자가 이해하는 「법치국가에서의 지방자치」라는 시각에서 볼 때,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틀도 제도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또한 미흡한 것일지라도 현재에 구축되어 있는 틀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새 정부의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미흡한 제도 두 가지만 먼저 언급해본다.

3. 어떠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하고 ...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는 지역 중심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자치기구를 설치하여 그 고유사무를 국가기관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고유사무란 자치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치사무 없는 지방자치는 상상할 수가 없다. 자치사무의 개념은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시·도나 시·군·구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무 중 어떠한 사무가 자치사무이고 어떠한 사무가 위임사무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이를 자신 있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자치사무의 개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학자의 생각과 대법원의 태도가 상당히 다르다고 볼 것인데, 일반 국민들은 더욱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이 어려울 것 아닌가. 정부가 산하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고 그 연구기관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보고서의 내용을 마치 금과옥조처럼 활용하는 것이 그 동안의 정부의 행태가 아니었던가? 그 연구기관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아울러 자치사무의 개념에 정통한 법학자 등을 충분히 참여시킨 가운데 진행하였다면 사정은 다르겠지만, 과연 그러했는가? 누가 이에 대하여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판결로서 자치사무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희귀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지방자치 관련 입법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만의 하나라도 행정안전부나 법제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법률에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을 명백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결코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 싶다. 누구라도 법령을 볼 때, 쉽게 어떠한 사무가 자치사무이고 어떠한 사무가 위임사무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새 정부는 당장이라도 시작하여야 한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기운이 잘 보이지 않는데 ...

4. 지방재원의 확보도 법령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1) 근년의 어느 정부를 불문하고, 지방재정확충에 관심을 보이지 아니한 경우는 없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재원을 마련해주면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에 그 만큼 유익한 것도 사실이다. 지난 정부에서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하는 세재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의 확충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갔지만, 이제는 그 비율을 높이는데 국가의 의사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2)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특히 검토가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상당부분이 기관위임사무라는 현실을 전제로 할 때,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따르는 비용부담의 문제이다. 지방자치법 제141조 본문과 지방재정법 제2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41조 단서와 지방재정법 제21조를 보면,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한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별로 경비(비용)를 계산하여 그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야 할 것이다.

지방재원의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중앙정부 기관위임사무 처리 경비 전액 교부 →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그러나 행정의 실제상 관련법령 규정대로 국가가 경비를 준 적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지방교부세를 주고, 보조금 등을 주면 그것만으로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관련 조문을 무시하여도 지방자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지방자치만 하면 되는 것인지 반드시 법에 따른 지방자치일 필요는 없다는 것인지,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분이 어려워져 주지 아니한 것인지, 다른 특별법이 있어 이러한 지방자치법령의 집행이 불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규정들이 사문화(死文化)된 것인지, 아니면 필자가 모르고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러한 문제가 필자의 무지에 따른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면 참 좋은데, 지방재정의 확보도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바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도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돈을 풀어주고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은 법치국가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5. 헌법을 개정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수 있을텐데 ...

(1) 지방자치의 핵심 개념인 자치사무도 불분명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아가는 핵심수단인 지방재원의 확보도 불완전·불안정하고, 조례제정권도 미흡하기 그지없는 등 현재의 지방자치는 온전한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아주 멀어 보인다. 헌법상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아주 미흡하기에 이러한 문제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의 두 개의 조문에서 지방자치에 관해 직접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규정 내용도 성숙한 국민들의 의식에 부응할만 한 것이 아니다.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가 국민의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된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바, 헌법상 지방자치 관련조항도 이 시대의 국민들의 의식에 적합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생각건대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이념, 국가권력과 자치권의 상호관계, 자치사무의 범위(권한의 배분), 지방재정의 보장, 자치입법권의 확대, 국가감독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제소권의 보장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연방국가의 지분방(미국의 State, 독일의 Land)에 유사한 지위를 갖는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헌법에 두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2) 만약 국회와 정부가 헌법의 개정에 나선다면,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의 연구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방자치법학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지난 번 국회가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개정안 연구를 하였을 때, 헌법학자의 참여는 들었으나, 지방자치법학자의 참여를 들은 바 없다. 당시

헌법 개정 필요성

개정 헌법의 주요 관련 조항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 이념 확립 • 국가권력과 자치권의 상호관계 • 자치사무의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제소권의 보장 • 지방재정의 보장 • 자치입법권의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감독의 제한 • 통일 시대 대비 |
|---|--|---|

개선

← 중앙정치권의 의지 + 지방자치법학자의 참여

현행 헌법의 미흡한 지방자치 관련 조항

국회의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정치인들의 소박한 정치적 행태라고 한다면, 이해가 될 수는 있겠다. 지방자치 조항이 헌법에 있다고 하여 헌법학자가 지방자치를 잘 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학자들이 보다 잘 안다고 보아야 한다.

(3) 시·군·구나 시·도에서 활동할 때에는 그 누구 못지않게 지방자치에 적극적이다가 국회나 정부로 간 후 지방자치에 소극적으로 변한 사람들은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조직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자리에 따라 신념이 변하는 정치인이나 행정가는 우리 모두가 경계하여야 할 사람일 것이다. 그러한 사람이 희소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필자의 머리를 맴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정부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사무를 다루고 있거나 다루었다고 하여 대가인양 착각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치인과 행정가들도 우리 모두가 경계하여야 할 사람일 것이다.

6. 맺는 말

어떠한 천재도 하루 아침에 문제투성이의 지방자치를 완벽한 지방자치로 바꾸어 놓을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새 정부는 지방자치제의 개선·발전에도 보다 진지한 노력을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이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 선거운동 시에 입후보자로써 하였던 지방자치에 관한 약속이 반드시 실천되고 지방자치의 발전이 눈에 확연히 보이는 앞으로의 5년이면 정말 좋겠다. 「국민의 신뢰를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5년 후의 퇴임 시에는 「국민의 신뢰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바뀌는 것을 기대해본다. ④

지방 경쟁력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과제



글 이재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부간 재정관계는 과거의 낡은 틀에 묶여있다. 중앙정부가 재정 감독기능을 강화했지만 기대와 달리 지방재정의 경쟁력과 책임성은 계속 약화되었다. 역발상의 정책 전환으로 지방의 경쟁력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자율과 책임 원칙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재정분권 혁신이 필요하다.

1. 자치재정의 실종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재정분권은 '자치'와 반대 반향으로 진행되었다. 집권적 재정 기조가 강화되었고 '지방은 비효율, 낭비, 그리고 무능'이라는 상징에 갇혔다. 지난 십 수 년 동안 신공공관리주의에 기초한 정부 혁신이 추진되었다. 여기에서는 높은 성과를 지향하고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분권과 권한위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과'를 위해 중앙 집권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앙 관점에서 혁신 이론을 편의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만큼 지방재정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지방자치단체 혼자 힘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어렵다. 현실에서는 시장주의와 지방분권이 양립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지방의 선택이 경제적 효율성을 창출한다는 티부가설은 60년대 국민국가체제 속의 낡은 담론이다.

최근 주요 국가들은 중앙 집권적인 재정관리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대처정부 이후 자치담론이 실종되었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성과관리 통제를 강화하였다. 일본은 삼위일체개혁을 통해 재정분권을 확대했지만 실제 내용은 복지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시키는 수단으로 재정분권을 포장한 꼼수가 있다.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정립

- 지방의 고유사무 확대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비중 확대 → 재정 자율성 강화
- 국세를 지방세로 추가 이양 → 세입 자주성 향상
- 지방의 고유세원들이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지방세수로 제도화 → 법정외세목제도 도입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세외수입인 각종 부담금 → 지방세 전환

2. 하지만, 다시 재정분권

정책 환경을 고려하면 재정분권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 그런데 현재의 집권적 국가재정운영체제는 지방뿐 아니라 중앙재정에서도 낭비와 비효율성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재정 투자사업에서 주인의식과 재정책임성이 상실되었다. 중앙 각 부처에서 공모형 지방재정 사업을 확대하면서 중앙과 지방 모두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 지역단위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대한 성과를 창출했던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성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사회복지에서는 고비용-저성과 방식의 낡은 복지재정 관리방식이 고착되고 있다. 지방재정에서 복지지출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남의 돈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집행재량이 거의 없고 중앙정부 지침을 전달만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부간 복지재정 구조가 지속되면서 복지사업에서 비용-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방의 실험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십 수 년 동안 집권적인 재정체제는 의도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문제 상태만 악화시키고 있다. 각종 성과관리체제가 강화되어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사업들이 형식적으로는 의도한 성과를 창출한 것처럼 포장되지만 지방의 현장에서는 그것이 가지는 허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집권적인 정부간 재정관계 제도들이 중앙과 지방 모두에게 기대하는 재정성과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간 재정관계의 방향을 반대로 설정하여 분권지향적인 재정체제를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재정분권 원칙 정립, 지역주민에 대한 재정책임 강화, 그리고 분권형 국고보조금 체제 개편이 중요하다.

3.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정립

지방자치 부활 이후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서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분권재정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는 지방재정에서 '납세자 책임'구조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존재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방세입 구조를 고려하면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인 납세자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모두가 남의 지역에서 창출된 수익을 자기 지역에서 쓰고 싶어 한다. 그러한 의존적인 세입구조에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자치 재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희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기능을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의 고유사무를 확대하고 지방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

지방자치의 기틀 확립

- 정책의 결과와 재정 상황 및 재정 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
- 지방재정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한 구체적 공개 장치
-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 재정감시 활동과 주민 참여

세입 자주성을 높이는 대안들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강조되었다. 즉 최근 신설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수 비중이 높아지게 국세를 지방세로 추가 이양해야 한다. 과거 지방양여금 재원이었던 주세도 다시 지방세로 전환되어야 하며 지방의 고유 세원들이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지방세수로 제도화될 수 있게 법정외세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징수되고 있는 각종 부담금 가운데 지방세 전환이 타당한 재원은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다. 2011년 기준으로 6.6조원이 징수되었는데 지자체가 대행하는 징수율이 45.6%에 불과하여 공공재원 징수 관리에서도 쟁점이 있다. 자주재원주의를 강화하면 지역간 재정불균등이 악화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반재원주의 비판이 있다. 그런데 이 논쟁 속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입장 차이와 재정갈등으로 정부간 재정관계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없었다.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세의 추가적인 지방세 전환과 함께 지방재정에서 지자체들간에 자율적으로 재원 균형을 맞추는 수평적 재정 조정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중앙이 아닌 주민을 향한 책임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과 보고의 방향은 대부분 중앙과 상위기관으로 설정되어 있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에 대한 책임경영체계라는 표현 자체가 어색할 정도로 왜곡된 지방자치 재정관리 관행이 고착되어 있다. 지자체의 재정 투자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결과와 재정 상황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공개만으로도 최고의 재정감시 활동과 주민 참여가 가능하다. 기업들은 재무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하여 주주들의 투자에 도움을 준다. 각종 재무정보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전문가들의 설명도 같이 있다. 네티즌들은 각종 토론방을 통해 공개된 정보내용을 해석하고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주식회사의 기업정보 공개와 같이 제공되고 주민들의 비판과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의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결과를 공개하는 형식과 함께 관리과정에 대한 공개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심사분석할 때는 참여했던 분석기관과 전문가를 공개하고, 사후의 재정적 결과에 따라 유사 업무(기능)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전문적 분석 내용에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주식거래소 상장 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대한 책임부과와 유사한 것이다. 지방재정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한 구체적 공개 장치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쟁점 사업에 대

국고보조금체제의 전면 개편

개별보조금 중심의 수직적인 재정관계



지자체의 자율적인 재정혁신

- 복지보조금 사업에 특히 중요한 법정 기준보조율체계 재설계
- 현행 개별보조방식을 분야별로 포괄보조로 전환
-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중앙정부 사업 추진시 지자체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재정부담 수준의 신축적 운영 허용

해 참여자와 결정 내용 그리고 과정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사이트를 운영해야 한다. 이때 사법부와 같이 '소수의견'도 공개하여 주민들에게 비판과 판단의 여지를 넓혀야 한다. 재정사업에서는 자체평가와 같은 성과평가 제도가 있다. 통상적으로 내부평가는 현실의 성과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가 침체되어도 관련 부서의 성과는 좋았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주인인 주민의 소득은 낮아졌는데 대리인인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급여와 수당은 반대로 높아 질 수 있다. 일종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다. 강도 높은 책임경영체제를 위해 지역경제 및 재정 성과와 지자체 공무원 및 의원들의 인건비 총량 수준을 직접 연계하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국고보조금체제의 전면 개편

현재와 같은 개별보조금 중심의 수직적인 정부간 재정관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율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재량을 확보할 수 없다. 지금의 제도는 80년대 중반의 낡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면적 혁신이 필요한데 세 가지 사항들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첫째, 법정 기준보조율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이는 복지보조금 사업에 특히 중요하다.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기초복지(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보육)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성과책임과 재정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정부 지침을 확립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재원지원은 '보조율'이 아니라 지방재원의 '징발율'이 된다. 별도의 지방재정 통계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지역사회의 선호에 따라 선택이 중요한 기능에서는 자주재원을 통한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운영과 성과에 책임지는 정부간 재정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대도시 자치구의 복지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성이 높은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적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개별보조방식을 분야별로 포괄보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포괄보조는 개별보조와 지자체의 자주재원 사이에 존재하는 정부간 이전재정 장치이며, 형태와 내용은 제도의 설계 구조에 따라 다양하다.

셋째,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재정부담 수준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나아가 정책결정 과정에 지자체의 실제 대표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명품 세종시’

지역균형개발 위해 5개 권역별 전략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새해를 맞아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올해는 명품 세종시 건설의 기초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편입지역 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균형개발에 주력하면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에도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2012년 시정 평가

세종시가 출범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세종시의 기반을 닦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다. 시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크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이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새해에는 해야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다.

새해 시정 운영 방향

2013년은 명품 세종시 건설의 기초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해다. 2012년에 구상했던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다. 세종시는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3 정도이고, 중앙행정기관 등이 들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이의 17%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83%, 즉 편입지역의 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균형개발에 주력하면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에도 행정력을 쏟겠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구체적 복안

세종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맞춤형 개발전략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 선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마련할 것이다.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균형발전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방안

현재의 세종시특별법은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자립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법적지위, 관할구역, 재정특례 등만 간략히 기술돼 있을 뿐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빨리 처리돼야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이 가능한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400여개의 전경련 회원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투자환경 설명회’를 연 데 이어 200여개 정보기술(IT)업체를 대상으로도 같은 설명회를 열고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세종시의 여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세종시의 주택은 물론 의료, 문화, 편의시설 등 입주민 대책

세종시 인구가 지난 11월 말 현재 11만명을 넘어섰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 논란으로 주택과 교통시설 설치가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첫 마을 아파트 6만5천20가구가 이미 분양된 데 이어 새해 정부 세종청사 주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완공되면 주택난이 크게 해소될 것이다.

“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세종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열쇠이다
”

최근 이주 공무원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빈방 알선운동, 카풀제 운영, 시내버스 노선 증설, 외식업소 친절서비스 자율실천 등을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KTX 증설과 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 개통, 고속터미널 건립 등 교통시설도 속속 들어서고 있고, 충남대 제2병원과 대형마트 및 호텔 등 생활편의시설 건립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대전시·충남도·충북도 등 인근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세종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세종시가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선 행정기관의 힘만으론 불가능하다. 결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세종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은 그동안 세종시 사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했듯이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명품도시 건설 대열에 적극 동참해줬으면 좋겠다. 희망찬 세종시 건설에 전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린다. ☺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은 2002년 민선 3기 시장을 시작으로 3선을 역임하고 있다. 임기 중 지금까지 울산이 국가경제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이끌었고, 또한 미래 성장동력을 꾸준히 창출하면서 환경과 문화, 복지가 조화로운 울산을 만드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지난해는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맞아 울산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향한 다짐을 하였다. 2013년 울산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면서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2012년 시정 성과

지난해는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울산이 계속적으로 국가 경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환경,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결실을 거둔 해였다. 무엇보다 미래 성장동력이 될 동북아오일허브 사업과 테크노산업단지 조성을 구체화하고 주력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건설, 매립장 확장, 소각장 증설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종합장사시설 건립, 기업체 자율환경관리 협약 체결로 대기질 개선, 울산 4대강(태화강, 회야강, 동천강, 외항강) 생태하천 정비,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태화강대공원 봄꽃향연 개최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린시티를 만드는데 노력하였다.

그리고 태화루 건립 착수, 시립미술관 부지 확정, 울산야구장 착공,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 추진 등 삶의 질이 높고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기틀을 잡았다.

2013년 시정 방향

올해는 국정 및 시정 여건이 어느 해보다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 국가경제가 모두 대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의존도가 96%로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시련이 예견되고 있고, 이 점은

“
지난해는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맞아
울산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향한
다짐을 하였다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울산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에 힘을 기울이고 또한 울산의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다. 그리고 보육과 양육 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일자리 지원 등 꼭 필요한 대상에게 꼭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조성, 우량기업 및 투자유치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고 청년인턴 및 창업지원,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미래성장동력 보강을 위하여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을 본격화하고, 전 기자동차산업, 전자산업 육성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산학연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사업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석유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약 3,000만 배럴의 석유저장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울산을 동북아시아의 석유물류 중심지로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우리나라 석유의 수급 안정과 석유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1단계로 북항사업이 추진 중인데 2016년부터 상업적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고, 향후 2단계로 진행될 남항사업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동북아 오일허브 조감도



1



2

“지방을 믿고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행정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주기를 중앙정부에 바란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제언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0년이 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도 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미흡한 점도 많다. 제일 먼저 지방재정의 문제이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인데 지방정부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6:4 정도로 개편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5:5 내지는 5.5:4.5 정도이다. 지방세의 비율이 낮은 가운데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비용은 가능한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고 지방에 부담을 줄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다음은 중앙정부가 아직도 지방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너무나 많은 통제를 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도시계획이나 환경정비, 문화재 관리, 토지이용 등에 있어서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행정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을 믿고 이러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주기를 중앙정부에 바란다. 지방정부도 이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난 20년간 지방자치 경험을 통해 축적해왔다.

그리고 광역간의 문제와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대와 협력, 대화와 타협이 절실히 요구된다.



3

- 1 굴화하수처리장 준공
- 2 울산의 젓줄 태화강
- 3 울산야구장 조감도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집사광익(集思廣益) 2013! 대전이 달라지는 12가지 이야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 2013년은 '집사광익(執事廣益) 2013'이다. 집사광익은 지혜를 모아 이익을 얻는다는 뜻으로 대전광역시는 사회적 자본 확충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계획이고, 시민들이 복지와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대전시민은 물론 충청권 도민까지 교통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3년 대전이 달라지는 12가지 기분 좋은 소식을 함께 이야기해보자.

1. 대전시민대학 운영

충남도청사를 리모델링해 하반기부터 사회적 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민간이나 기존 평생교육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대전시민의 자치역량 제고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과, 가족 주말학습, 다(多)언어 강좌 등 평생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320개 강좌를 운영한다. 연간 4회를 운영하면 1280개의 강좌가 운영되고 하루 평균 약 91개 강좌가 운영된다. 강좌는 관련 대상과 수준, 시간대 등 차별화를 통해 기존 평생학습기관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타 기관에서 수행이 곤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야간, 주말반 등 특성화를 추진한다. 시민대학 운영으로 연인원 50만명 이상이 왕래하는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거점을 마련한다.

2. 사회적 일자리 확대

사회적 자본 확충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2014년까지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 목표를 세웠다. 현재 대전관내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은 총 91개로 금년도에 30여개의 대전형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4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사회적기업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을 부서별 예산 총액에 1%로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재능나눔 pool위원 활동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기별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수위원을 선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1사1사회적기업 결연활동을 통해 사회적기업들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과 민간네트워크를 연계할 계획이다.





3. 구룡지구 유니온스퀘어 개발

올해 신세계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해 한곳에서 쇼핑, 문화, 레저 등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신개념 복합 엔터테인먼트인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을 개설한다. 6천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 8조원의 경제유발효과, 5천명의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엑스포과학공원 복합테마파크 조성

엑스포과학공원에 대규모 놀이시설과 문화수익시설이 조화된 중부권 최고의 첨단영상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해 고용유발효과 18,900명, 생산유발효과 2.6조원, 관광유발효과 연 1,140만명이 찾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1993년 열린 엑스포는 운영비를 포함해 1조8000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대전의 발전을 10년 앞당겼다. 이같이 롯데의 복합테마파크도 대전 발전을 또 10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5. 2013 대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

대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은 지난 해 2012년 18개국 52개 업체가 참가해 35만여 명 관람, 경제효과 407억원(626명 고용)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3년 올해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10월3일~10월6일까지 4일간 대전컨벤션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프랑스, 북남미 등 많은 해외 와인협회 유치를 통해 다양한 명품와인의 시음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전의 대표 명품축제로 정착시켜 와인축제와 유동의 중심지로서의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6. 시민합창축제

생활 속 합창문화를 통한 '문화도시 대전' 조성을 목표로 만들어진 통합창제는 시민 참여형 합창축제로 지난 해 42개 동 1,500여 명 출연, 10,000여 명이 관람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오는 8월29일~9월14일까지 평송 청소년문화센터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등에서 열리는 제3회 대전국제합창페스티벌은 대전시민합창제와 대통령상 합창대회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외 유명 합창단의 초청공연도 함께 선보인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화합과 소통의 하모니가 대전이 과학도시와 더불어 세계합창센터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것이다.

7.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추진

단기적으로 각종 위원회와 회의 등을 옛 도청 회의실을 활용해 개최하여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연간 50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유발되는 시민대학을 운영해 평생학습의 전당으로 굳건히 한다. 또한 대전의 근·현대 역사자료 전시물을 전시하는 근현대사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공모전이나 대관시에 전시실로 활용된다.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다.

8. 건강100세 장수도시 프로젝트 추진

잘 가꿔놓은 소공원에 설치된 다양한 운동시설과 숲과 물이 어우러진 갑천, 대전천, 유등천의 자연거도로와 산책로, 대전둘레산길 등 대전은 건강한 장수도시로서의 최적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시민건강 100세 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신체+정신+환경」에 초점을 두고 신체적인 건강증진, 생애주기별 질병예방, 그리고 청정환경 조성 등 분야별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한다. 「시민체력증진센터」를 신설하여 맞춤형 건강처방과 시민건강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예방중심의 건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 건강증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와 클린 환경도시 조성을 통해 장수도시를 구현한다.

9. 마을공원 만들기

마을공원은 일상적인 주거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에게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거지 전체의 '오픈 스페이스'로 쾌적한 환경을 형성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외부 공공 공간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사회적 교류와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다. 특히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사업은 이제까지 관 주도 조성 방식에서 탈피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공간구성, 시설물조성, 관리 및 활용 등 가능한 모든 과정에 지역주민의 뜻이 모아진다. 동네의 특성을 담은 마을공원 30개소를 조성해 지역민의 정서적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10.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및 충청권철도망 조기구축 노력

민·관·정 추진위를 통해 도시여건에 부합되고 시

민이 공감하는 건설방식과 차종을 결정하여 도시철도 2호선은 2014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5년 공사를 착수해 2018년 완공할 계획이다. 2호선이 건설되면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버스 17.1km/h, 승용차 25.1km/h보다 빠른 36~40km/h 속도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도심과 신도심간 접근성이 높아져 도시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충청권 발전을 이끄는 중심 교통체계의 충청권철도망의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대전시 관내 구간이 조기 건설되어 지하철 2호선과 비슷한 시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11. 갑천 친수구역(도안 생태호수공원) 조성

사업비 4,972억원이 투입되는 '도안 생태호수공원'은 올해 안에 실시설계 및 보상에 착수해 서남부권에 2018년까지 호수공원(392천㎡), 주거지역(464천㎡)을 조성한다. 저영향 개발기법(LID)과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고,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한 생태습지 조성은 물론 갑천과 주거지역 사이에는 완충녹지를 두어 최대한 갑천 생태계에 악영향이 없도록 조성하게 되며 대전의 대표적 친환경 명소로 부상하리라 기대된다.

12. 응능정이 LED영상거리 조성

사업비 165억5천만원을 투입해 응능정이 거리에 폭 13.3m, 길이 214m의 LED영상스크린을 설치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테마시설 조성을 완료한다. 이벤트 및 각종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할 수 있어 지역문화 활성화는 물론 첨단기술과 스토리가 융합된 신개념 멀티미디어 관광명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상생으로 도약하는 2013년 글로벌도시 광주를 말하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시정의 2013년 핵심 어젠다는 '상생'과 '도약'이다. 민주·인권·평화도시, 문화콘텐츠 허브도시, 첨단과학산업도시의 3대축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광주가 명실상부한 글로벌도시로의 행보를 본격화하고 더 크게 도약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2012년 시정 성과

지난해는 우리 시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발굴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대선공약에 대거 반영되었고, 각고의 노력 끝에 2013년 제12차 세계한상대회 등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하였으며, UEAMA 사무국이 개설되는 등 국제화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데 이어 아시아 지방도시 최초로 인권헌장 제정 및 인권지표 개발로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를 국내외에 각인시켰으며, 수출 141억불 달성, 우리나라 21번째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전국 최초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지원, 28년 만에 노사정 완전합의를 통한 택시6부제 시행, 세계 스포츠 사상 최초로 구도심 노후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는 2015 광주 하계U대회 선수촌 조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건설하는 데 기틀을 잡았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20일에는 민간사업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제2순환도로1구간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 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했다. 이는 강운태 시장의 '2순환도로 재정경감' 민선5기 공약과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법상의 감독권자로서의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따른 중도해지의 창의적 방안 제시로 해법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이로써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의 원상회복 처분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시는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해지시 지급금의 80%로 관리 운영권을 매입함으로써 약 551억원의 예산절감과 무상사용기간인 2028년까지 약 5,000여 억원 이상의 재정을 경감하게 되며, 전국 최초모범사례로 민간투자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2013년 시정 방향

올해에도 대내외 환경은 그리 밝지 못한 상황이다.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으로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낮게 전망되는 데다 신흥 개도국의 경제 또한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 전문기관의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3%대에 머물고 있다. 이렇듯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2013년은 「상생과 도약」을 통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을 가속화 하는 해가 될 것이다.

1. 광주공약 프로젝트의 실현

제18대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으로 채택된 우리 시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새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되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여 광주공동체의 도약과 획기적 발전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아시아문화수도 육성」 등 7개의 당선인 공약사업과 「동북아 상품거래소」, 「광주권연계 광역교통망 확충」 등 8개 추가반영 요청사업 등 지역공약이 정부계획에 반영되고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와 유치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글로벌도시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금년에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 「JCI 아·태총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자문회의」,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뒷받침할 것이다. 또한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3대 국제스포츠행사로 일컫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반드시 광주에 유치되도록 국내외 네트워크와 모든 행정력을 결

집하고, 2015 광주하계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추진하여 남북교류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3. 광주형 행복복지모델 구축

우리 지역이 보유한 사회적 자산과 정책수단을 창의적으로 재설계하여 일자리·건강·주거·문화·인권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 모델로 「광주형 행복복지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 건강 행복도시 조성, 주거안정 대책 추진, 문화향유 기회 확대, 인권도시 조성 등 5대 전략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분야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하에 2014년까지 일자리 4만9천개 창출, 특성에 맞는 모범 협동조합 300개 설립 지원 등 전국 일자리 모범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로 건강 분야는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 전담주치의 제도 도입 등 촘촘한 건강복지 실현으로 건강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주거 분야는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하고 3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 혼합형, 평생임대주택 등 다양한 광주형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등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넷째, 문화분야는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고 도서관에 문화프로그램을 접목하여 마을공동체의 복지문화센터로 조성하는 등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권에서 쉽게 문화를 접하고 창출하는 문화복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인권분야는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광주현장 시행, 인권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인권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4. 5대 역점분야 추진

①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건설

골목상권 등 서민의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여 광주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 해 나갈 계획이다.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지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사회적 경제모델 시범도시 육성, 개방형 R&D특구 등 지역산업의 새로운 도약기반 구축, 적외선 광학렌즈 개발 등 광산업 집중 육성, 2단계 가전로봇 융합산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3D융합산업, 동북아 상품거래소 등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통하여 지역수출 160억불, 113개사 9,300억원 투자유치, 2014년까지 고용률 57.4%, 일자리 28,000개 창출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② 멋들어진 문화공동체 구현

문화와 예술을 통해 아시아,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콘텐츠 허브도시로 비상하기 위해 광주의 문화적 스펙트럼을 넓혀갈 계획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4년 완공, 아시아문예창작공간, 시화문화마을 등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문화기술(CT)연구원 개원 및 미디어 콘텐츠 타운 조성 등 문화산업 육성기반 구축, 야구장 금년 말까지 완공,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 건설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문화예술의 본고장으로서 창작·교류활동과 문화산업이 번창하는 문화콘텐츠 허브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③ 행복한 생태공동체 조성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라 지속가능한 인간중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과 외곽의 자연축을 잇고, 도심재생과 친환경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통해 생활환경의 변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무등산 국립공원 관광자원화, 주상절리대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광주천·영산강변 자전거 터미널 확대 등 자전거 시범도시 조성, 행복한 창조마을 지속 확대, 평동 군 훈련장 조기 이전 등 도심재생 사업 추진, 「도시 CDM」 국제환경기구나 공동 개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광주~순천간 전철화사업」 조기 추진,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도시 환경과 도심재생,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④ 세계속의 인권·평화공동체 실현

민주·인권·평화도시의 위상에 부합되도록 시민의 인권증진과 인권보장을 실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2013 세계인권도시포럼」, 「2013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회의」 등 인권관련 국제행사를 통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국내·외로 공유 확산시키고, 5·18 아카이브 구축, 광주교도소 부지에 한국 민주주의 전당과 민주·인권체험장을 건립하여 5·18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도록 하며, 3년 연속 건강랭킹 1위 수성, 장애인 재활병원 운영, 어린이집 및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 확대, 광주희망나눔 봉사재단 설립, 여성가족친화마을센터 구별 1개소 설치, 영구임대아파트 1,200호 및 공공임대아파트 1,122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광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⑤ 참여·소통의 자치공동체 구현

시민의 행복과 소통이 시정철학으로 정착된 만큼 시정발전의 동반자적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시정 참여영역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화합과 상생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민과 만남의 날, 현장방문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2015년까지 자원봉사자 45만명 등록 추진, 민간주도의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가 본격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등 밝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2014년 세계보건기구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안전증진 프로그램 본격 추진, 학생사랑지역협의회 및 성폭력추방시민협의회 운영 활성화,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시민이 안전한 사회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경기도, 2012년을 이렇게 달려왔다!

경기도의 2012년은 도의 미래를 밝혀줄 만한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은 해였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100조 규모 투자 유치가 확정됐고, 경기북부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 섬유산업 분야 육성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농업분야 신기술이 해외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6개 철도 노선이 개통돼 도민들이 교통편의를 대폭 확대했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12년 경기도의 주요성과를 되돌아 봤다.

1. 건국 이래 최대의 투자유치, 삼성전자 평택 고덕 산단 입주

2010년 12월 경기도 평택 고덕 산업단지 입주를 약속했던 삼성전자가 지난 7월 31일 용지매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평택입주를 확정지었다. 사전입주협약 체결 이후 19개월, 경기도의 부단한 노력 끝에 본 계약이었다. 삼성전자는 평택 고덕국제화도시 일원 395만㎡(약 120만평) 규모 고덕 산업단지에 태양전지,

의료기기를 비롯한 신수중사업과 차세대 반도체 생산라인 등에 100조원 이상을 투자, 30,000명 이상의 고급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평택 고덕 산단 입주는 투자규모만큼 파장효과도 컸다. 당장 미군기지 이전,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평택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고덕신도시를 도가 추진 중인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융·복합도시의 모델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무한돌봄에 보육 복지를 더했다.

2008년 전국최초로 시작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무한돌봄 사업이 출범 5년째를 맞아 더욱 발전했다. 경기도는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만 4년 동안 모두 7만 3천여 위기가구에 811억 원을 지원,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무한돌봄 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2010년 무한돌봄센터라는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를 선보인 경기도는 각 시군별로 274억 원의 예산을 투입 민간사례관리자 220명을 채용, 지난 3년 동안 35,310가구에 사례관리를 추진했다. 경기도는 이런 노력의 결과로 올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최우수 복지기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올해는 무한돌봄으로 시작한 경기도 복지가 보육 분야까지 확대된 의미 있는 한 해다.

3. 사통팔달 경기도, 철도 전성시대 개막

경기도는 2012년 모두 6개 철도 노선이 개통되면서 신철도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6월 개통한 수인선은 추억의 협궤 열차로 유명했던 노선으로 운행 중단 17년 만에 복선전철로 재탄생, 시흥 오이도에서 인천 송도를 하루 163회 운행하고 있다. 7월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의정부 송산에서 장암까지 11.1km 구간으로 시가 직접 운행하는 도내 최초 경전철이란 점에서 눈길을 모았다. 9월에는 양평 용문과 강원도 서원주를 잇는 27.9km 길이의 중앙선 복선철도가 개통됐다. 10월에는 온수역과 부평역을 잇는 부천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이 개통됐다.

이 노선은 부천지역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을 대폭 늘리고 상대적으로 지옥철로 유명한 경인전철의 혼잡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개통 한 달째를 맞은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 이용객은 모두 253만 여명으로 같은 기간 경인전철 이용

객의 15%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11월에는 경원선 신탄리~철원 백마고지역 5.6km가 개통됐다. 6.25전쟁으로 파괴됐다가 60여 년 만에 복원된 경원선은 향후 러시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등과도 연결될 수 있는 노선이다. 최근 개통된 분당선 연장 기흥~망포 구간 개통은 그 동안 버스뿐만 아니라 통행하던 수원과 화성, 용인 등 250만 지역주민들에게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를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전국 일자리 25%, 경기도가 만들었다.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작년 3월 경제부지사직 신설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청년취업지원 확대,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 등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펼쳤다.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는 모두 11만 4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통계청 고용동향). 이는 작년 목표였던 13만개의 88% 수준으로, 전국 일자리 창출의 25%를 차지했다. 지자체 가운데 1위이기도 하다.

경기인재트랙, 청년뉴딜, 특성화고 취업지원 등 청년취·창업지원을 통해 5,500여개,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1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경기도 일자리정책의 핵심사업인 일자리센터의 기능도 강화됐다.

도는 도민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7월 수원역에 일자리상담실을 개소하여 1일 평균 330여건의 상담과 1일 평균 17여명 취업 실적을 거뒀다. 또한 구인구직 정보가 부족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역시 161회 운행 기간 동안 4천5백여명에게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해, 602명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성과를 얻었다. 경기도는 민선5기 동안 총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세계가 주목한 경기도 농업

2012년은 경기도의 첨단 농업기술에 세계가 주목한 한 해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카타르의 한 유력 기업인은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나 스마트 식물공장 투자유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10월 김 지사가 카타르 도하의 카타르식량안보기구를 방문,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스마트 식물공장 기술을 소개했는데, 현지 기업인의 즉각적인 반응이 온 것이다. 스마트 식물공장은 도 농업기술원이 2010년 첨단 정보기술(I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첨단 작물재배 유리온실을 말한다. 경기도는 제품이 아닌 플랜트 수출이란 점에서 스마트 식물공장 수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해외에서 로얄티를 받는 꽃으로 각광받던 경기도 장미 역시 큰 일을 해냈다.

경기도가 개발한 장미인 ‘딥퍼플(Deep Purple)’이 지난 9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화훼박람회에서 국내 최초로 대상을 받은 것이다. 모스크바 국제화훼박람회는 세계 5대 국제화훼박람회 중 하나로 화훼중주국인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 유럽의 강호들을 물리치고 얻은 상이기에 더욱 값지다고 하겠다. 딥퍼플은 현재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해외 9개국 31개 농장에 46만주가 판매돼 세계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 농업이 가야할 길을 경기도가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도는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에 오는 2015년까지 농업기술원 이전을 완료하고 농업연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6. 경기도 북부, 국내 섬유산업의 메카로 재탄생

2011년 체결된 한·미 FTA는 소규모 니트, 섬유 공장이 난

립해있던 경기도 북부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한·미 FTA 관세 완전 철폐 시점인 2022년까지 경기도 섬유산업을 세계적 수준의 섬유·패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는 1단계로 2016년까지 섬유산업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 마케팅 지원 등 3대 분야 21개 사업에 총 6,380여 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뉴욕에 경기섬유마케팅센터를 개설, 기존 LA 섬유마케팅센터와 함께 도내 섬유기업의 미국 진출을 도왔고, 9월에는 한·EU FTA체결을 맞아 독일과 이탈리아 전시회에도 참가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7개 해외전시회를 찾아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도는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제품의 불량원인 규명 등 맞춤형 현장으로 기술지원 사업으로 421건을 해결하며 영세 섬유업체들을 후원했다. 경기도는 도내 섬유산업의 기획-생산-마케팅을 연계한 섬유종합지원센터와 기획-디자인-봉제-마케팅을 연계한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등이 완료되는 올해 이후에는 경기북부 섬유산업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 사상 최악의 가뭄도, 폭염도 이겨냈다.

2012년 5월은 20년 만에 찾아 온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작년 5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두 달 가까이 경기도에 내린 비는 모두 25.8mm, 도내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이 32%까지 곤두박질쳤다. 재작년 같은 기간에 189mm의 비가 왔고, 같은 기간 평년 강수량이 202mm인 것과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이다. 타들어 가는 농심을 적시기 위해 도는 3,296명의 인원과 2,406대의 장비를 동원, 긴급 용수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을 실시했다. 7월에 찾아온 폭염도

가뭄 못지않은 피해를 줬다.

경기도는 작년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18일간 폭염 정보를 발령했다. 27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30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팔당호 녹조로 인한 수돗물 냄새 민원도 389건이 발생해 사회문제가 됐다.

그러나 도는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무더위 쉼터 6,759개소 운영,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등 신속한 현장맞춤형 폭염 대책을 시행해,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없이 폭염을 막아냈다. 경기도는 작년 8월 기상이변으로 인한 녹조와 폭염피해가 해마다 반복된다며 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폭염과 녹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재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8. 경기도 4G 운동으로 일하는 방법을 바꾼다.

작년 2월부터 시작된 4G 운동은 올해 경기도 행정 최고의 화두였다. 4G 운동은 일종의 일하는 방식 개선운동으로 회의와 문서는 줄이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4G 운동이 시작되자 먼저 회의와 서류가 눈에 띄게 줄었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4G 운동이후 도는 상반기 동안만 약 651대의 프린터를 줄이는 등 인쇄물 줄이기 운동을 통해 약 3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뒀다. 도가 실시한 직원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문서작성이 줄었다고 대답했다. 장거리 출퇴근과 출장자의 업무효율 증대를 위해 설치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도 꾸준히 늘었다.

4G 운동이 정착되면서 회의와 보고가 줄면서 현장방문이 늘었다. 도지사 주재로 매주 주요 도정을 논의하는 실·국장 회의는 실내회의를 줄이고 현장을 찾았다. 가뭄이 문제가 되면 농촌에 가서 가뭄대책회의를 열고, 산업현장에서는 기업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도는 지난 1년 동안 모두 24번 현장을 찾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논의했다. 4G 운동 2년차인 올해는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변동좌석예약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9. 군(軍)과의 협력강화, 결실을 맺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군의 40%, 주한미군의 70%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도(軍士道)다. 그만큼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과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 2012년은 이런 군과의 협력관계가 결

실을 맺은 중요한 한 해였다. 가장 큰 성과는 지난 1970년 무장공비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김포시와 고양시의 발전을 막았던 한강 철책선을 철거한 일이었다.

경기도는 작년 4월부터 김포시 구간 9.7km 구간과 고양시 구간 12.9km에 대한 철책 제거작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3월 까지 철책선 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사라진 한강 둔치를 도민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도는 철책이 제거된 고양시 구간은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김포시 구간은 친환경 하천 둔치로 개발하기로 했다. 철책제거를 위해 도는 지난 2006년부터 협의를 진행했으며 2008년 12월 철책선 철거에 합의했었다.

이어 도는 작년 10월 육군 제20사단, 양평군과 함께 20사단이 사용하던 부대 내 연병장을 안보교육관, 병영도서관, 주차시설, 휴게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해 안보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민간에 개방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선보였다. 올해 초에는 국방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경기 김포시 운양동 등 경기 북부 지역 149만 8천㎡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기도 했다.

10.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 공무원 되다.

작년에는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력을 시작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였다. 남북한 공동 말라리아 방제, 개성 종묘장 건설, 평양 벼농사 시범사업 등을 선보이며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올해는 별다른 사업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에 경기도는 남북교류 활성화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새로운 정책을 선보였다. 작년 12월 함경남도 단천 출신의 이수혁(33세, 남)씨를 경력경쟁을 통해 최종 선발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은 국내 최초로 현재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8년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정착을 돕고 있다. 현재 도에는 전국 자치단체 중 최대인원인 30명(도 6, 시·군24)의 공무원이 근무 중에 있다.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65명 중 절반에 가까운 46%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직 공무원 채용 외에도 올해부터 도 소속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충청북도, 웃음이 넘쳐나는 행복한 경로당으로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21세기, 생활의 풍요 속에 세상은 고령화시대라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충청북도는 노인 관련 복지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2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노인여가 활성화 프로젝트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라는 의미에 '9988 행복나누미사업'을 시행하였다.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9988 행복나누미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2012년 말 기준 충북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15,245명이 다. 이를 총인구수로 나눈 고령화율은 13.7%로, 올해말까지는 고령사회(14~20% 미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의 지역은 고령화율 20% 이상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지 오래다.

급속한 고령화는 전통적 효사상의 붕괴·가정의 해체현상과 맞물려 심각한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부양 기피, 노인학대와 방임은 이미 익숙한 단어가 되었으며, 노인여가문화 향유의 기회 부족으로 많은 노인이 외로움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 이는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저하를 동반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발전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에서는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경로당 순회 노인여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9988 행복나누미사업」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였다.

「9988 행복나누미사업」은 이시종 지사가 직접 사업명을 작명하고 프로그램 운영과정 등을 수시로 챙기는 등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민선5기 중점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으로, 노인여가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여가문화의 보급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99세 이상 88하게 사시는 실버토피아 충북을 실현하고자, 도내 읍·면·동 내 소외지역 경로당(1,200개소)에 행복나누미(70명)를 파견하여 다양한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사, 레크리에이션 강사, 건강관리사, 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자격과 경력을 가진 전문강사들로 구성된 행복나누미들이 사업추진 동력으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산간·오지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찾아감으로써 접근성과 이동성의 제약으로 그동안 노인복지관의 여가프로그램이나 기존 경로당 지원 서비스 등을 받지 못하던 소외지역 경로당에 레크리에이션·웃음치료·노래교실·건강체조·공예활동 등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수요조사를 통한 경로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경로당 순회 노인여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9988 행복나누미사업」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였다 ”





2012년 사업성과

- **사업내역** : 주 1~2회 레크리에이션 및 웃음치료, 건강체조 등 여가 프로그램 제공
- **추진경로당 수** : 1,296개소(목표대비 110%)
- **참여 어르신 수** : 약 22,680명(경로당 평균 17.5명)
- **서비스 연계** : 6개 시군, 건강검진(보건소), 이미용 봉사 등
- **사업 효과** : - 산간오지 경로당이 웃음바다로 변하는 등 분위기 쇄신
 - 구성원간의 사이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경로당이 건전한 노인여가복지 공간으로 탈바꿈 됨
 ※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에서 수범사례 및 벤치마킹 선진사례로 주목

어르신 반응

-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족도가 높고, 경로당이 활기차고 즐거워짐
- 건강체조, 웃음치료 등 건강 프로그램과 종이공예 등이 인기가 높고, 피부 마사지 등 미용 서비스에 도 큰 호응

행복 나누미

-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드린다는 보람이 큼
- 공예교실 등은 덕으로 작품을 가지고 가서 손주 등 식구들에게 자랑 할 수 있어 호응이 큼

마을주민

- 소외지역인 마을 경로당에 서비스로 주민 자긍심 고취
- 고령화 및 농촌지역 어르신의 여가복지에 대한 관심 유도 및 경로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개선

지난해 시범사업에의 어르신들의 호응과 전국적인 관심 집중 그리고 경로당이 건전한 노인여가문화 공간으로 점차적으로 탈바꿈되는 긍정적 효과에 따라 충청북도는 '13년도에는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8일 9988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괴산군의 청안분회 경로당을 방문, 모범경로당 현판을 직접 걸어드리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대상 경로당 선정서를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시사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여가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9988 행복나누미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올해부터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질병·빈곤·고독의 노년 3고(三苦)가 없는 어르신이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 라며 사업 본격 확대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충청북도는 '12년도 7억여 원이었던 사업비를 33억원으로 증액하여, 현재 70명인 행복나누미를 140명으로, 수혜경로당을 현 1,200개소에서 전체 경로당의 50%인

2,0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모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로당을 시군별 1개소씩 선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경로당의 냉·난방비용과 전기요금 부담 경감으로 경로당을 통한 여가문화가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얼마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역시·도 가운데 충북도민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45.4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충북에 사는 대졸 이상 고소득 미혼의 20대 전문직 종사 여성」이라는 재미있는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전국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측정한다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가장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올까?

9988 행복나누미사업이 본격 확대 추진되는 2013년, 웃음이 넘쳐나는 행복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충북도내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궁금해진다. ●



충청남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선도

충청남도에서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사회적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시책으로 세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성장 선도 활동을 돌아보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경제부흥의 원천

충남의 경우 중소기업이 도 제조업의 99.5%를 차지하고 종사자도 68.9%에 이르는 등 일자리창출 및 제조업의 근간으로써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구조적 모순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어 2004년 이후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화되는 등 지역경제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최근 새 정부에서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5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정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창조경제 주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에서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사회적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공정경쟁과 성과공유가 이루어지는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

1. 전국 최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의회 구성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적인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 2011년 3월 24일 충남도의 대표적 대기업인 삼성전자 등 5개사와 중소기업·단체 대표, 기업지원기관·단체 대표, 경제학 전문교수 등 총 1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동반성장협의회'를 출범하였다.

아울러, 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건설, 유통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분야별 대·중소기업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 체결

道内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확대하고, 건설한 균형과 창조·혁신적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 21개사와 132개 중소기업(1차협력사 86, 2차협력사 46)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정한 거래보장, 자금 지원, 하도

“ 사회적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공정경쟁과 성과공유가
이루어지는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





급 대금 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보호 및 품질 개선 지원 등 동반성장에 대한 공감대 확산, 신뢰도 향상을 기하고 있다.

3. 동반성장 Fair, 구매상담회 개최

중소기업의 실질적 판로개척 및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9월 충청남도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페어」를 개최하여 학계·연구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동반성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요기업과 공급 중소기업간 매칭을 통한 기술·구매상담회, 구매조건부 및 민관 공동투자 개발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한 협약중소기업 역량강화, 대기업·공공기관 구매정책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결속 강화

1. 제조혁신 파트너십 지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조원가 절감을 통한 글로벌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협력사를 선정하고 중소협력사의 제조혁신을 종합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제조 혁신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현장진단, 혁신환경 조성, 제조혁신 방법, 기술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와 대기업이 각각 50%를 분담 추진하고 있다.

2. 동반성장 협약 이행실태 조사·환류

지난 해 동반성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반성장 협약체결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 협약이행상황, 우수사례, 애로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조사결과에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협약체결이 도내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에 '다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으로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미비점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동반성장 문화 지속 확산

충남도는 동반성장 문화의 지속적 확산 방안으로 「기업과 농촌이 상생하는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운동」을 2013년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 등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업과 동반성장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내실운영과 함께 연말에는 협약이행 실태 조사 등을 추진하고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개선 등 정부시책에도 적극 동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충남도는 동반성장 문화의 지속적 확산 방안으로 「기업과 농촌이 상생하는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운동」을 2013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과거와 현재가 상존하는 공간 전혀 뜻밖의 유산, 강원도 DMZ 기행

올해는 정전 60주년을 맞는 해이다. 세계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에서는 정전 6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DMZ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남북은 38선을 기준으로 2km씩 후퇴하면서 그 사이를 비무장지대라는 완충지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남측은 DMZ 후방 5~20km 밖에 민간인 통제선이란 또 다른 선이 생겼다.

그 후 50년이 지나 한 세기가 지나고 또 다른 세기가 다가왔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그곳은 아직 인간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곳이지만, 자연은 인간의 의도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곳을 지구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자연생태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러나 그곳은 찬찬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흥미로운 곳이기도 하다.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국 자연사 박물관'이다. DMZ는 전혀 뜻밖의 자연 유산으로 남겨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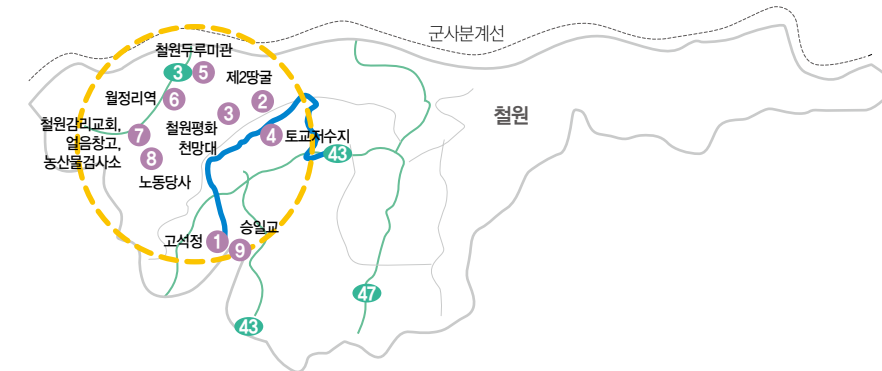


1. 철원권역

철원은 휴전선과 맞닿은 곳으로 그 곳에는 지금도 한국전쟁의 상처가 녹슨 철마와 풀썩의 기차길, 총탄 구멍이 숭숭한 철원 노동당사, 열흘 동안 주인이 스물 네번 바뀐 백마고지 등으로 남아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입간판이 선연한 신탄리역을 오래도록 바라보노라면 북녘 땅을 내달리는 기차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신탄리에서 '철의 삼각지대'로 향해 가다 검문소에서 신분증만 확인하면 바로 통과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연고가 있거나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작은 고개를 넘어가면 나오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백마고지 전적비, 직진하면 전망대, 오른쪽으로 가면 노동당사다. 전망대에서 동송읍으로 가는 길을 따르면 30만발의 폭탄세례 속에서도 끝내 사라지지 않고 남은 동주금융조합, 제사 공장, 얼음창고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길이 끝나는 지점에 지붕은 날아가고 기둥만 우뚝 서 있는 노동당사 건물도 남아 있다.



2. 북한강 유역

① 비목의 고장 화천

경춘가도,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를 달려 춘천으로 진입한 다음, 407번 도로를 타고 화천으로 이동한다. 화천 도입부에서 붕어섬 휴양지를 만날 수 있다. 안보 관광

안보관광지 추천코스

고석정 → 제2땅굴 → 철원평화전망대 → 토교저수지 → 철원두루미관 → 월정리역 → 월정리역 → 철원감리교회, 얼음창고, 농산물 검사소 → 노동당사 → 승일교



고석정 제2땅굴



평화전망대 두루미관



노동당사 승일교

화천 비목코스

붕어섬휴양지 → 화천온천관광지 → 파로호안보관 → 파로호선착장 → 해산전망대 → 평화의 댐 안보관 → 비목의 현장 → 평화의 종 공원, 세계평화의 종 타종



파로호 안보전시관 해산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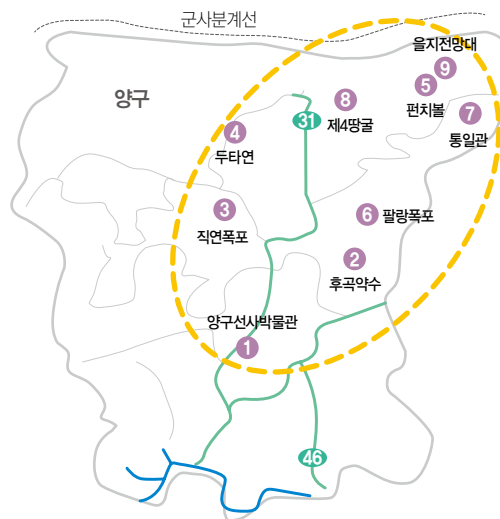
평화의 댐 안보관 비목의 현장

지로 손꼽히는 파로호와 화천 온천관광지에서 피로를 식히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단장한 평화의 댐과 비목공원 견학으로 순결한 젊의 님을 위로하는 것도 잊지 말자.



2. 펀치볼!! 양구

이 곳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선사박물관과 향토사료관을 견학하고 후곡약수에서 잠시 목을 축이고 직연폭포와 두타연의 자연을 만끽한 다음, 펀치볼마을의 경치와 팔랑폭포를 구경한다. 이 때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 북한관 옆에 자리잡은 전쟁기념관 방문이다. 실제 전투가 있었던 곳의 높이를 표시한 조형물부터 기념관 군데군데에 표시된 전쟁의 상처들은, 지금 서 있는 곳의 생생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북한관에서 을지전망대와 제4땅굴 관광을 신청한다. 마지막으로, 한여름에도 긴팔옷을 준비해야 할 을지전망대를 견학한 다음, 내부 관람용 전동차가 운행하는 제4땅굴에서 필히 지하수를 마셔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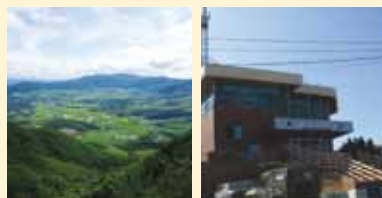


양구 펀치볼코스

양구선사박물관 → 후곡약수 → 직연폭포 → 두타연 → 펀치볼 → 팔랑폭포 → 통일관 → 제4땅굴 → 을지전망대



양구선사박물관 두타연



펀치볼 을지전망대

3. 자연과의 새로운 모험! 인제

인제에는 수많은 계곡과 세계적인 자연생태보호구역이 숨어 있다. 그렇듯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 전체를 전국 최초의 모험관광단지로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인제 관광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새로운 개념의 여행지로 성장하게 되었다.



레프팅 번지점프 백담사 대승폭포

인제 모험관광코스(A코스)

MTB → 레프팅 → 번지점프 → 패러글라이딩

인제 모험관광코스(B코스)

용대리자연휴양림 → 백담사 → 십이선녀탕 계곡 → 대승폭포 → 소승폭포 → 설악산 장수대지구 → 진동계곡 → 방동약수 → 함강정 → 대암산 용늪

3. 금강산 관광! 남한의 최북단 고성권역

남과 북이 맞닿아 있는 동해안 최북단 고장, 고성을 통해 육로로 금강산을 만난다. 남과 북처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고성엔 세계적인 명산 금강산과 동해안 일대의 감호, 구성봉, 삼일포, 해금강 등이 북 고성에 속한다.

DMZ과 남방한계선이 만나는 해발 70m고지의 통일전망대에 서면 금강산의 구선봉과 해금강이 지척에 보이고, 맑은 날에는 신선대, 옥녀봉, 채하봉, 일출봉, 집선봉 등 천하절경의 금강산을 볼 수 있다. 발아래에는 2004년 12월 개통된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로 금강산 육로관광이 이루어진 모습도 볼 수 있다. 휴전선 철책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초소는 남북한의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해금강 6.25 전쟁체험 전시관 DMZ 박물관 해양박물관

고성 안보관광코스

간성향교 → 건봉사 → 통일전망대, 6.25 전쟁체험 전시관 → DMZ 박물관 → 화진포(이승만 · 이기붕 별장) → 해양박물관



국비비율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

글 김홍환 (정책연구실 책임전문위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개요

지난 2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나,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지속 계류 중이다. 법사위원장은 다음 회의

에서 반드시 다루겠다고 하였으나, 3월 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사 간에 안전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논의되지 못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작년 0-2세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약1조 3,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의 부담 주체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영유아보육사업은 작년 대선을 앞두고서 여야를 막론하고 전면 무상보육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2012년과 비교하여 약2조 4,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간 재원을 둘러싼 갈등 발생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20% 상향 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바로 이 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다.

법사위에서의 주요 쟁점

법사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국회법 제58조 정부의견청취의무, 국회법 제83조의 2 예결특위의 협의, 국비비율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서의 규정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회법 제58조와 관련된 논란을 살펴보면, 제7항에서 “위원회는 안전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실제 11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당초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국비비율을 30% 상향조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20%로 수정되어 가결된 것이다. 국회 지방재정특위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6개월에 걸쳐 수차례 정부의 의견을 듣고 국비비율을 20% 상향조정하는 결의안을 11월 19일에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의 의견을 들은 지방재정특위의 결의사항을 존중하여 20%로 수정의결한 것이므로 정부의 의견을 듣지 않아 국회법 제57조 제7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흠결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국회법 제83조의 2 제1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재정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예결특위와 협의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라는 것의 의미인데, 동조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규칙을 살펴봐야 하는데, 국회규칙이 이를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절차적 흠결을 논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보건복지부 예산안도 동시에 의결하였는데, 이때 영유아보육예산은 국비비율 조정을 위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수정되어야 함을 부기하여 예결특위에 이송하였다. 이밖에 국회 법사위에서 현재까지 국회법 제83조의 2 제1항과 관련된 흠결을 심사한 적이 없다는 것도 이러한 흠결의 지적이 다소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율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은 법률에서 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개별 시행령으로도 국고보조비율을 정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심사대상인 법적 정합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으로 보조율을 정해야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국비비율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국비비율을 정부가 매년 예산에 자의적으로 조정함에 따른 최근 5년간 국비비율이 70%에서 60%로 약 10% 줄어 지방비 부담이 약 10조 이상 증가한 사실을 비추어 본다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법률로써 국비비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법사위에서의 논란이 된 사항을 정리하자면, 딱히 절차상 흠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오히려 현재 중앙집권적 재정운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지방재정난을 고려한다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같이 국비비율을 법률로써 규정하는 등의 입법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

영유아보육사업의 중앙-지방간 재정분담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나는 영유아보육사업의 성격이며, 다른 하나는 재정부담 주체들의 재정부담 능력이다.

첫째, 영유아보육사업의 성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전국적이며 일률적으로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은 국가사무로 분류한다.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표적 국가사무인 국방이나 외교의 경우 지방정부가 소요재원을 부담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영유아보육사업을 이와 비교해 살펴보면, 전국적인 사업으로서 그 기준 또한 일률적이므로 국가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원의 부담도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재원부담 주체의 부담능력에 관해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국회의 영유아보육사업 예산 확정 이전에 2012년에 비해 약7,000억원을 인상하는 안을 제출한다. 특히 영유아보육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은 법률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행정부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예산안 편성권을 가지고 있음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중앙정부가 정책결정의 주체인 점을 고려하면 예산부담 역량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지방정부는 2008년 이후 지속된 사회양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세입은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2년 영유아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약 6,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중앙정부가 일부 보전한 것이다.

정리한다면, 영유아보육사업의 성격과 재원부담 역량을 고려할 때 국비비율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특히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해야 하는 예산과정을 고려할 때, 4월 국회에서 반드시 국비비율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 ●

법령에 의한 자치권 제약의 현황과 문제

글 김수연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도

우리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고, 제118조는 지방의회의 구성과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에 관

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제도를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한다(헌재 96헌마200).

이러한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전통적인 이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고유한 권능으로 가진다. 특히 헌법이나 법률이 국가나 그 밖의 공공단체의 사무로서 유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처리하고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원칙인, 소위 ‘전권한성 원칙(Allzuständigkeit)’이 지방자치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권이 제약

제도 보장의 핵심 내용이다. 헌법은 이와 같이 지방자치를 보장하면서도, 그 내용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은 세부 사항을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방자치단체 조직에 관한 법령들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0조 내지 제116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령인 동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나치게 상세하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법」 제110조는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둘 수 있는 최대 수를 제한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단체장 수 및 2명 이상 부단체장을 두는 경우 그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자

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별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 실·국·본부 수와 담당관 수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묶여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행정기구를 조직·운영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수 및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대한 결정은 자치조직권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연방국가인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지방정부가 조직과 인사를 결정한다. 각 지방정부에서 인구와 규모, 지역적 특성, 지역 중점 사업 등을 반영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탄력적으로 지방행정조직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예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면적에 대한 제한규정을 들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서 시행령 별표에서 매우 상세히 청사의 면적 기준은 물론 자치단체장의 집무실 면적까지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조례로 정할 여지가 거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때 문제가 되었던 호화청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그 대표자인 지방의회에서 감시하고 통제하여야 할 문제이지, 몇몇 사례를 들어 전체 지방정부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과도한 법령의 제정은 자치권을 침해

법률에서 지방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위임의 형식 자체보다는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여 사실상 지방이 자율적으로 세부 사항을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 즉 자치의 영역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헌법에서 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더라도 대통령령에서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하여 조례로 정할 내용이 없는 것은 오히려 법률의 취

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용적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담은 법령 규정은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송을 통해 다룰 수 있는 여지도 있다.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로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보듯이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은 자치입법권의 보장에서 출발한다. 자치법규가 실질적인 지방의 법규로써 기능하여 살아있는 규범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법규가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위법령이 지나치게 상세하여 자치법규로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부재하다면 자치입법권은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조례에 위임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 법률에서 지방의 사무를 규정할 경우에는 모든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통적 필요사항이나 지침만을 시행령에서 규정

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직접 위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항을 나누어 조례에서 바로 규정할 수 있도록 직접 위임한다면, 지방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여지가 훨씬 많아지고, 법률의 취지에 따라 자치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법령으로 인해 지방자치제도의 공동화 내지 형해화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법령의 선점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자치입법권이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고,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 보장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의 규정 여지를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를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지방정부에 대하여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동반자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

UCLG 이사회 도시 창원시, 세계지방정부를 주도하다

세계 지방자치단체의 UN이라 불리는 UCLG(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세계지방정부연합). 지방자치단체의 대민서비스 질적 향상, 주거환경 향상 도모, 지역사회 경제발전 지원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전 세계 지자체 간 정보와 기술 교환을 장려하며 지방자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136개국, 1,000여 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대 국제기구 UCLG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사회 도시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교류 활동하고 있는 도시가 있어 주목 받고 있다. 현재 UCLG WORLD(세계지부)와 ASPAC(아시아·태평양지부)에서 이사회 위원으로 연임 중인 창원시다.

산업도시로 시작한 창원시, 환경수도에 도전하다

환경도시의 아이콘 창원시는 1980년 대한민국 최초로 계획 도시로 조성하기 시작하여 기계공업 중심도시로 압축 성장해 왔다.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2006년 환경수도로 선포하고 도시 전 분야에 환경인자를 접목해온 결과 이제는 대한민국 환경모범 도시로 자리매김 했다. 또한 2010년 마산시와 진해시를 통합하여 인구 약 110만 명, GRDP 약 27조에 이르는 메가시티로 대한민국 최대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도시행정 모델로 이목을 끌고 있다.

환경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창원시는 지난 2004년 11월 UCLG WORLD(세계지부)와 ASPAC(아시아·태평양지부) 회원으로 가입하며 창원시를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다.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계기는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 변신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계획도시, 공업도시로 성장한 산업도시다. 시가 성장하는 가운데 무분별한 개발, 에너지 소비, 환경오염, 교통체증, 지구온난화 등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주목했다. 이에 창원시는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로서 환경에 주목하고, 다양한 환경도시 정책을 시행했다. 산업도시 창원의 환경수도 도전은 성과를 거두게 되고,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전 세계 지자체의 글로벌 시정 경연의 장이 되고 있는 UCLG를 무대로 삼았다.

창원시, 국제 사회에 이름을 알리다

UCLG 가입 후 창원시의 우수한 환경관련 시책을 알리는 활동과 국제 네트워크 형성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2004년 제1회 프랑스 파리 WORLD 총회, 2009년 WORLD 집행부·이사회, 2010년 제3회 멕시코 멕시코시티 WORLD 총회에 참석했다. 특히 2007년 제2회 대한민국 제주 WORLD 총회에 참석하여 '창원시의 환경수도 정책 및 교육 정책'을 발표했으며, UCLG WORLD 이사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의사결정권을 가진 도시로 승격되면서 창원시의 국제 위상도 높아지게 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창원시의 명성이 자자하다. 2004년 UCLG WORLD 지부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UCLG-ASPAC에 가입했다. ASPAC 지부는 7개 권역 별 지부 중 최대 규모로 아시아·태평양 18개국 120여 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을 구성원으로 UCLG 회원도시들의 권역 내 우호협력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창원시는 총회, 이사회 등 매 회의마다 회원도시들의 요청으로 환경수도, 누비자 시스템(무인대여 공용자전거 시스템) 등 선진 시책을 발표해 오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하반기 ASPAC 집행부·이사회를 유치해 '하반기 대한민국 창원 이사회' 개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ASPAC 회장이자 인도지자체연합회장인 자틴 모디는 "창원시 자전거 정책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창원시의 자전거 시스템을 연구하여 인도에 도입하고 싶다. 지방자치단체연합, 그리고 창원시장님의 도움을 받아 프로그램을 교환하고 싶다"며 자전거 정책 벤치마킹 및 상호 교류를 적극 희망하는 서신을 전달했다. 이는 환경수도 프로젝트를 세계에 전파하면서 창원시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고, UCLG 회원도시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장이 되었다.

창원시의 생태 마인드가 접목된 시책 전파는 국내외 도시

에서 벤치마킹 효과로도 연결됐다. 지난 2010년 핀란드의 대중교통 전문가 대표단이 대중교통정책과 버스정보시스템(BIS)에 관한 정보교류 및 벤치마킹을 위해 창원시를 방문했다. 이들은 시책 설명을 듣고 함께 현장 방문을 하며 창원시의 대중교통시스템과 환경수도 정책에 주목했으며, 특히 공영자전거 '누비자'에 대해서는 시승을 해보는 등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며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창원시의 도심가로수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창원시를 방문했다. 지하철 7호선 개통과 연계해 부천시의 주요도로로 자리 잡은 길주로를 시민의 편안한 쉼터 및 특색 있는 가로수 숲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방문단은 창원시의 대표적인 메타세콰이어길인 의창구 용호동 도서관길과 도청광장을 비롯해 중앙대로와 원이대로의 느티나무와 배롱나무를 둘러보며 벤치마킹에 열을 올렸다.

더 큰 도약을 위한 창원시의 도전은 계속된다

현재 창원시는 UCLG WORLD지부의 이사회 위원과 ASPAC 이사회 도시로 활동하고 있다. 수많은 시와 도가 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입김을 내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창원시는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는 제4회 모로코 라바트 WORLD 총회에 참석하여 WORLD 이사회 연임을 계획하고 있다. ASPAC의 경우 지난 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ASPAC 총회에서 이사회 위원 재연임이 확정되어 2014년까지 이사회 도시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창원시는 지금 더 큰 도약을 앞두고 있다. 오는 4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의 ASPAC 사무국에 창원시 직원이 파견되어 업무를 시작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국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창원시가 처음 있는 일로 사무국의 요청에 환경관련 담당자가 파견된다. 창원시의 핵심 시책인 기업사랑, 평생교육, 환경, 보건 등 시책 사례를 회원국에 전파하는 데에 주력할 것이다. 활동 범위를 무한대로 늘려가고 있는 창원시. 세계지방정부의 주도도시로서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기대해본다. 🌟



서울특별시

서울시, 모바일 서울에 '서울 모바일 전시관' 구축



서울시는 m.Seoul(모바일 서울)에 '서울 모바일 전시관'을 오픈하고 서울시 산하 5개 전시관(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청계천문화관, 동대문역사관, 수도박물관)의 240여 개 주요 전시물에 대한 모바일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 모바일 전시관'을 통해 전시관 내 전시물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해설 영상을 제공하며 차별 없는 박물관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애인에 위한 수화 영상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한다. 전시관 관람객은 QR코드가 부착된 전시물 안내판을 찾아 QR코드를 스캔하면 각 전시물의 안내 영상을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력을 통해 NFC 태그 방식의 서비스를 추가하여 현장에서 보다 쉽게 안내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전시물 앞에 부착된 안내판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전시물에 대한 정보페이지가 나타나며, '영상' 버튼을 선택하면 안내 영상이 재생된다.

NFC 태그를 이용하려면 우선 NFC 기능이 제공되는 스마트폰(안드로이드 계열)인지 확인 후 다음과 같이 NFC 설정 부분을 체크한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전시물 안내판 가까이 접촉시키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관람객은 각 전시관의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시안내영상을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못한 관람객은 전시관 내에서 제공하는 스마트기기(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 모바일 전시관' 서비스가 출시됨에 따라 관람객들은 물론 전시관을 방문하지 못한 시민들도 '모바일 서울(http://m.seoul.go.kr)'을 통해 전시물 안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전시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도 활용 가능해 교육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봉연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시관 관람 영상 제공이 목적"이라며 "앞으로 차별 없는 관람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부산시청 내 국제교류전시관 개관

부산시가 1966년 대만 카오슝과 처음 자매도시 체결을 시작하면서 국제교류의 물꼬를 연지 올해로 57년을 맞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에 걸쳐 26개국 31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체결을 맺고 있다.



또한 21세기 동북아 해양 수도로 성장한 부산시는 세계 유수의 도시들로부터 자매도시 체결의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자매도시 체결을 통한 국제도시로서 역량 강화 및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산시는 26개국 31개 자매(우호)도시를 소개하고 도시별 교류를 통한 다양한 기념품 전시 및 글로벌 도시 부산의 발자취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제교류전시관을 부산시청 1층에 설치, 지난 2월 27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국제교류전시관은 수년간 자매도시들을 비롯한 해외 여러 도시와의 친분과 신뢰의 산물로 태어난 곳이다. 특히 전시되어 있는 기념품들은 부산시가 세계 여러 도시와 교류를 확대하며 글로벌 도시로 발전해왔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발자취들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시관은 중국, 일본관을 비롯한 대륙권역별 8개 전시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글로벌 도시에 걸맞도록 관공서 분위기를 탈피하여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산뜻하고 깔끔한 갤러리 분위기로 꾸며다. 각 도시의 특색을 강조하여 만리장성, 방갈로, 바팔로, 신전, 모스크 양식의 상징물들을 제작하여 전시관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이색 체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각 대륙별로 전통 의상을 입고 원하는 자매도시를 선택해 사진을 촬영하여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할 수 있는 크로마키 존을 설치하는 등 볼거리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체험존의 묘미도 더

했다. 아울러, 기념품 전시 외에도 세계 각국의 악기, 화폐, 공예품 등 독특한 주제로 향후에 다양한 기획전시가 가능하도록 무빙월(Moving wall)을 설치한 가변적 공간을 마련하였다. 국제교류 전시관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청내 작은 갤러리로서 시청을 방문하는 내·외빈과 시민들에게 세계로 열린 국제도시 부산의 위상을 홍보하는 시찰코스로서 상당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역시

2·28민주운동정신 계승 위한 기념회관 개관

대구시는 제53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일을 맞아 기념식을 겸한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개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은 시 교육청의 협조로 1960년 2·28민주화운동 현장의 의미가 큰 명덕네거리 인근의 명덕초등학교 부지 일부(1,025㎡)를 확보했다. 총 80억원(전액 국비)의 사업비로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2,847.98㎡ 규모로 지난 '11. 7월에 공사를 착공해 '13. 1월에 전시부문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완료했으며, 지난 2월 22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개관식을 갖게 됐다.

기념회관에 2·28 정신이 녹아들도록 하기 위해 건물 중앙 부분에 중정을 설계에 반영해 두류공원에 있는 2.28기념탑 모형을 축소해 설치하고 건물 앞부분에 설치된 모형탑을 받치고 있는 기단석을 한반도 모형으로 해서 2·28정신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든 정신운동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했다.

기념회관 앞 화단에 기념동산을 조성하고,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대구지역 8개 고교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느티나무(경북고, 대구농림고), 담쟁이덩굴(사대부고), 향나무(경북여고), 소나무(대구고, 대구공고), 은행나무(대구상고, 대구여고) 등의 참여학교 교목을 식재하고, 그 당시 회화나무 밑에서 2·28민주운동 참여 결의문을 낭독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회화나무도 식재했다. 앞으로 대구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교육청의 학생 현장 체험학습과 연계해서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견학을 실



시하도록 하고, 골목투어 코스에 반영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삼성상회터 → 국제보상운동발상지(구 광문사) → 박근혜대통령생가터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 국제보상운동기념회관으로 이어지는 '가칭' 「국국의 길」 탐방로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 사랑의 1000호 집수리사업 가동

대구시는 민간의 기부와 직접참여를 통해 올해부터 3년간에 걸쳐 1천호 이상 집수리를 해주는 나눔과 희망의 『사랑의 1000호 집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랑의 1000호 집수리사업』은 기업, 기관·단체, 공공기관이 직접 집수리 또는 현금지원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도배·장판, 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등 생활필수시설을 해당 2~3백만원 정도로 무상 수리해 주는 민간지원 사업이다. 100대 기업, 스타기업, 유통업체 및 기관·단체 등이 참여해 3년간 1000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400호 정도 집수리할 계획이다. 올해 1호 집수리사업은 지병이 있는 가장과 장애인 두 아들이 같이 거주하며 특별한 소득원이 없어 노후한 주택을 방치하고 있었으나 『사랑의 1000호 집수리사업』 신청을 통해 집수리 기회를 얻었다.

이번 사업은 지역 건설업체인 화성산업주식회사가 동구 신천동 소재 기초생활수급자의 싱크대, 도배, 장판지, 대문 등을 교체하는 등 5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소요됐으며, 자체 봉사단 20여 명과 임직원이 함께 집수리에 참여해 지역의 따뜻한 정을 나눴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나눔과 봉사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 단체에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인천시, 17개 마을기업 공동체 육성 사업 선정

인천광역시는 올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 위한 17개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3월8일 각 군, 구별 자체심사 후 추천된

24개 마을기업(신규 12개, 재 지정 12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중구 무의까지늘섬마을 농촌체험 사업 등 모두 10개의 마을기업 사업을 2012년도에 이어 재선정하였으며, 계양구의 계양한우리 등 7개의 사업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모두 17개의 사업을 2013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중심으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최근 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체 사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각 사업별로 신규사업은 5,000만원, 재선정 사업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가의 마케팅,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마을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

그동안 시에서는 2010년부터 총 44개의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21억 6천 1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 선정된 28개의 마을기업에서 8억 2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312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마을기업 신규 및 재선정으로 지역자원과 각종 인적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주시, 시민과 함께 추진한 녹색시책 전국 공모전 수상



광주광역시는 푸른광주21협의회(상임회장 박경린)가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국회 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고 국

회와 녹색성장위원회,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이 후원한 '2013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모전'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은행 활성화 등 녹색시책이 우수시책으로 선정돼 광역의제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상(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광주에서 추진한 탄소은행 활성화, 녹색소비, 자연순환 실천, 저탄소 녹색아파트, 찾아가는 기후 학교 등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 거버넌스로 지역사회에 저탄소 녹색실천을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번 시민부문에 선정된 푸른광주21협의회는 2010년 지속가능발전 대상 공모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2012년에는 앞산 뒷산 네트워크 사업으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 4회째인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신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시책 추진에 공로가 큰 공공, 기업, 자치단체, 시민, 학생, 언론 등 6개 부문에 걸쳐 시상했으며 대상(국회의장상)은 KBS가 수상했다.

이정삼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수상은 각종 국제행사를 앞 둔 광주 시민의 환경의식이 높아지는 사례라"며 "광주시가 글로벌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녹색성장 선도 도시 건설 총력

대전시가 녹색성장 5개년 중기계획에 따라 녹색성장 선도 도시 건설을 위해 올해 5326억원을 투입해 각종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난 3월 4일 중구청회의실에서 노병찬 행정부시장, 양지원 KAIST교수, 녹색성장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녹색성장 추진성과 및 올해 추진 계획 실행계획(안)에 대한 보고회, 올해 추진할 119개 단위사업 심의, 녹색성장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전시 녹색성장 1단계 추진계획(2009년~2013년)은 '녹색성장 탄소저감 선도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4대전략, 10대 정책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다.

도시철도 2호선 예타통과, 충청권철도망 예타 대상 신청, 유성~세종 BRT(일부개통, 잔여구간 예타신청), 대전~세종BRT(실시설계완료 및



1공구 공사착공), 행복청을 연결하는 광역자전거 교통망 조성 등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토대를 마련하고 녹색교통 투자 사업을 확대했다. 시는 올해도 '탄소저감도시, 녹색산업 도시, 녹색시민 도시' 건설을 목표로 녹색성장 119개 단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추진할 4대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도적 대응 △녹색 신성장산업 육성 △탄소 저감형 도시·교통체계 구축 △시민주도형 녹색 혁명 등이다.



울산대곡박물관 '천주교의 큰 빛, 언양' 특별전 개최

울산대곡박물관(관장 신형식)에서는 울산의 서부 지역사를 다루는 조선 후기~근대 언양 지역의 천주교 수용과 박해,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다루는 특별전 '천주교의 큰 빛, 언양 - 구원의 길을 찾아온 길-'을 개최하고 있다. 전시는 지난 1월 30일 개막하여, 3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전시유물은 언양지역의 천주교 수용과 순교에 관련된 자료와 각종 천주교 교리서, 박해 관련 자료, 언양현 호적대장(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9호) 등 78점이다.

한국에서 천주교는 17세기 초 서학(西學)이라는 학문으로 조선에 알려진 후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신앙을 가졌던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조선시대 경상도 작은 고을 언양(彦陽)은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인해 박해기에 피난처로만 알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언양은 경상도 남부에서 최초의 산양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 배경에는 천주교가 경상도로 확산되기에 앞서 이미 천주교를 수용한 인물들의 노력이 컸다. 창녕 성씨 출신의 양반 지식인이나 향리 가문들의 역할이 그것이다.

울산대곡박물관은 이번 전시로 한국 문화 변동과 지역 문화의 다양성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기획이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관람을 바라고 있다. 한편, 울산대곡박물관은 대곡댐 수몰부지 발굴성과와 대곡천 유역의 역사문화를 전시하기 위해 지난 2009년 6월 개관하였으며, 울주 천전리각석(국보 제147호) 인근에 있다.



세종시, 2013년 노인일자리 본격 스타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이하 세종시)가 지난3월 4일부터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2013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보다 12억 7,000만원 증가한 총사업비 23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본격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복지·교육)형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역환경 개선, 스쿨존 교통지원,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 행복경로당 무료급식 등과 ▲시장형에 아파트 택배, 짐물공예사업 등 총 10개소 수행 기관에서 31개 사업에 720명의 어르신이 참여한다.

신규사업에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주변 아동보호를 위해 CCTV 상시 관제사업을 채택, 관내 초등학교 등 9개교에서 어린이 보호사업을 추진하며, 시범사업으로 연중 노인 일자리 노노케어사업, 시장형사업으로 실버카페 등이 새롭게 운영된다.

올해에는 일자리 사업기간이 9달로 지난해보다 2개월이 연장되고 일자리도 지난해보다 120명이 증가했지만, 구직 신청자도 지난해의 두 배가 넘어서는 등 일자리 참여에 대한 욕구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노인 일자리 확대 창출을 위해 세종시형 신규 노인 일자리 사업의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과 함께 안전교육 및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인재원 상상경기, 공교육기관 분야 대상 수상

경기도인재개발원(원장 안수현)의 스마트러닝 서비스 '想像경기'가



「제7회 대한민국 교육산업 대상」에서 '공교육기관 부문 大賞'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헤럴드 미디어가 2006년 제정해 올 해로 7돌을 맞은 '대한민국 교육산업

대상'은 국내 대표적인 교육산업 관련 상으로 교육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기업을 선정하여 수상하는 시상식이다. 금번 수상한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상상(想像)경기'는 경기도가 2011년 공공교육훈련기관 최초로 도입해 올 1월 현재 학습자 150만 명을 돌파한 인기 스마트러닝 서비스다.

안수현 경기도인재개발원장은 "공직자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실천적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미래학교 스마트 스쿨 지원사업」 업무협약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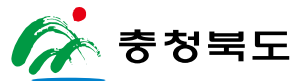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도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삼성전자 사회봉사단과 「미래학교 스마트 스쿨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을 지난 2월 26일 도청 본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원도지사, 강원도교육감, 원기찬 삼성전자 사회봉사단장 등이 참석하여 「미래학교 스마트 스쿨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래학교 스마트 스쿨 지원사업」은 삼성전자 사회봉사단의 기부사업으로 강원도내 소규모 학교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총 8개 학교 22개 학급에 갤럭시 노트 등 각종장비 약 12억원 상당의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해 "스마트 스쿨"을 설치한다.

도 교육청에서는 이번 스마트 스쿨 설치가 이루어지는 학교 교사에게 스마트교육 장비와 S/W에 대한 사용방법과 스마트교육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스쿨이란 과거 칠판과 분필이라는 전통적 교실에서 벗어나 갤럭시 노트, 전자칠판, 미디어 솔루션 교육용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학생과 교사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1대1 교육을 말한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스마트 스쿨 운영을 통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

츠를 활용한 스마트교육 추진으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21세기 학습자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대두되는 창의력, 협업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향상시켜 도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 올해 지역정보화사업에 105억원 투입

충청북도가 올해 105억원을 투입해 장애인과 결혼이민자 등의 정보복지 향상 등 다양한 정보 선진화사업을 펼친다.

충청북도는 지난 2월26일 영상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하고 2012년 정보화추진실적 및 사업비 105억원이 투입되는 2013년 지역정보화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을 보면 저소득자, 고령자, 결혼 이민자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교육 확대, IT/SW 융합 기술로드맵, 컨설팅, 국내·외 인종취득 등 지원으로 지역 SW 산업의 전략적 육성, 디지털 도정을 위한 행정정보화 수준 향상, 결혼 이민자, 저소득층 아동 등 정보화 취약계층 정보인프라 구축,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중심으로 한 안전하고 건전한 정보환경 조성 등 스마트 IT와 융·복합 기반을 통한 행정서비스 선진화에 역점을 두었다.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확대

저소득자, 고령자, 결혼이민자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장애인들에게도 장애유형에 맞는 특수키보드, 스크린리더, 영상전화기 등 정보통신보조기와 사랑의 그린PC를 지원하여 웹 접근성을 높이고, 또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다.



희망산촌만들기사업 22억원 투입, 단기 고소득 산채재배 지원

충남도는 '희망산촌만들기사업'으로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집중 육성

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 해에도 지속 실시한다.

'희망산촌만들기사업'은 충남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산림복지 분야 3농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산채재배를 지원해 고품질 청정임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단기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다.

2012년에는 우선 산채재배 경험이 많아 기술전파가 가능한 기존산채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희망농가 166가구를 선정하여 총 16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222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1천만원씩 총 2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채재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현장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등 10여 명의 기술지원자문단을 구성하여 재배현장 중심으로 기술지도와 자문을 통해 경험이 부족한 농가의 산채재배 관리방법을 뒷받침해 줌으로써 단기간 안정적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아갈 방침이다.

그 실행방안으로 기술지원자문단을 활용하여 380여 전체 참여농가에 대해 집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채재배에 대한 기초지식을 전파하는 한편, 수시로 산채재배 현지에서 기술지원자문단과 재배농가가 참여하는 질의답변식 현장교육으로 효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다.



전라북도 도시경관 확 바꾼다



전북도는 금년부터 품격 있는 경관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자체 경관디자인 시범사업과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인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도자체 시범사업은 금년부터 2개년에 걸쳐 15억원을 투입 가로환경 조성,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을 금년도 상반기에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는 국토환경디자인 사업인 완주고산 선택리지 고산만들기 사업(설계비 1.5억원)이 선정되어 고산지역의 역사문화를 이용한 거점형 경관디자인 마스터 플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간 경관사업은 국가지원으로 '09년부터 '12년까지 327억원을 투입, 익산의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의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사업, 국토해양부의 국토환경디자인사업 등 중앙부처의 경관디자인 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장기적으로는 '14년부터 '20년까지 105억원을 투입 14개소의 경관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도시의 경쟁력과 지역발전은 도시의 이미지 향상에 있다고 보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개선 사업을 확대, 품격있는 경관만들기를 통하여 『도시경관』을 전북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태와 문화 체험의 장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는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주제로 전라남도 순천만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꽃의 정원, 물의 정원 등 다양한 정원과 공연장은 물론, 세계23개국의 전통정원들을 만날 수 있으며, 국내외 유명작가와 시민의 개성 넘치는 아이디어로 조성되는 테마정원, 세계적 정원디자이너 찰스쟁스가 연출한 호수공원 등 80여 개의 다양하고 개성 있는 세계 여러나라의 정원문화를 감상할 수 있다.

순천만에서 도심쪽 5km 지점에 조성되고 있는 박람회장은 도심을 경



유하는 동천 우측으로 박람회장이 들어서며 맞은편에는 국내최대 규모의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주제관 기능과 앞으로 순천만 방문자 시설을 대신하게 될 국제습지센터와 수목원 그리고 저류공원이 조성된다.

한방체험센터에서는 어린이들의 아토피질환 치료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수 있으며, 바람길, 도시숲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휴식공간 조성으로 앉아서 보고, 서서보고, 누워서 보는 등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정원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어린이들의 꿈이 담긴 16만점의 그림들을 감상할 수 있는 꿈의 다리는 버려진 컨테이너를 활용해 만들었으며, 컨테이너의 구조적 특성을 살려 비와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쉼터의 역할까지 겸하게 된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 박람회 관람에 따른 내용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http://www.2013expo.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신비의 섬 울릉도를 해양관광의 메카로

경상북도가 독도의 모도(母道)이자 동해안의 대표적인 섬 울릉도를 해양관광의 메카로 개발한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올해 34억원을 투입, 전망공원 및 친수공간, 바다낚시터 등을 조성해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제3차 울릉도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에 따라 총 495억원을 투자해 울릉도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휴양관광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거북바위 전망공원, 행남 해안공원조성 및 도동 해안친수공간 조성, 선창 해안친수공간조성, 내수전 바다낚시터 조성 등 5개 사업에 집중 투자된다.

경북도 최중원 환경해양산림국장은 "울릉도에 도서종합개발사업과 함께 수중전망대, 해안 인공풀장 등이 설치되는 천부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완공되면 울릉도가 국제적인 해양관광·휴양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울릉도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릉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울릉도 천혜의 아름다운 기암괴석, 해안절경, 청정바다를 더욱 돋보이도록 다듬어 국제적인 해양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울릉군과 공동으로 지난 1988년부터 2007년까지 2차에 걸쳐 총사업비 401억원을 투입 171개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제4회 2013 경남국제식품음식박람회 개최

21세기 경남지역 식품의 다양하고 안전한 식품음식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경상남도 와 창원시 주최로 국제식품음식박람회가 2013년 3월 28일(목)부터 31일(일)까지 4일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10개국 150개사 300부스 규모로 식품관, 식품기기관, 커피&베이커리, 외식프랜차이즈관으로 나뉘 전시되며, 국내외 우수식품 및 식품가공기계의 비교/평가를 통한 정보 교환의 장이 됨은 물론, 식품산업의 최신 동향과 최고급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커피&베이커리관에서는 부대행사로 경남바리스타챔피언십의 개최로 앞으로 한국바리스타의 초석이 될 예비바리스타들의 경연을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커피관련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

GNFOOD2013은 식품 종합전시회로 해외 10개국의 다양한 향토

음식 시식 및 체험을 통해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경남지역을 1차식품에서 가공식품산업의 메카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3 통영 국제음악제

작곡가 윤이상(1917-1995) 선생을 기리는 12번째 '2013 통영국제음악제(TIMF)'가 오는 3월 22일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하는 개막공연 '세멜레 워크'를 시작으로 28일까지 경남 통영에서 개최된다.



2013 통영국제음악제의 주제는 작곡가 윤이상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고독(Free & Lonely)'으로써, 개막공연 '세멜레 워크'는 헨델의 오페라 '세멜레'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연출한 공연이다.

상주 작곡가로는 2008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음악감독을 맡은 중국 출신 작곡가 '치강 첸'과 프랑스 작곡가 '파스칼 뒤사팽'이 초청되어 동서양의 현대 음악을 조명한 계획이며, 상주 연주자로는 첼리스트 '고티에 카푸송'과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젊은 아티스트로 초청돼 듀오 리사이틀과 협연 무대를 통해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그 외, 젊은 현악 사중주단 '루토슬라브스키 콰르텟 (Lutoslaw-ski Quartet)', 윤이상콩쿠르 입상자 시리즈 '조진주 바이올린 리사이틀' 등 젊은 음악인들도 자유와 고독을 주제로 연주하며, 대전시립합창단, 중국 칸템포 베이징 등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한층 더 높은 국제 수준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51회 진해군항제



벚꽃축제로도 불리 어지는 제51회 진해 군항제가 올해 2013. 4. 1(월)~10(수)까지 10일간 '벚꽃과 군악의 만남'을 주제로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타리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 50곳'에 포함 된 여좌천을 중심으로 멀티미디어 불꽃쇼, 벚꽃명소인 여좌천 불빛축제가 화려하게 추진된다. 특히 탐방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미8군 등 14개팀 600여 명이 참가하는 '2013 진해군악의장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이다. 진해 군항제는 지난 1952년 4월 13일, 우리나라 최초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복원로터리에 세우고 추모제를 거행하여 온 것이 계기가 되어 1963년부터 진해군항제로 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충무공의 구국의 얼 추모와 함께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벚꽃과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로 거듭나, 군항제 기간 동안 2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 규모의 축제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Jeju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과 함께 세계질 꽃피는 제주만들기 시동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세계7대 자연경관에 걸맞은 아름다운 정원형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도민자율 참여에 의한 『세계질 꽃피는 제주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985백만원을 투입하여, 꽃과 나무, 자연석, 초화류가 어우러진 정원형 꽃길조성 및 교통섬, 광장, 소공원 등 47개소 8,500㎡를 조성하고, 주요도로변 식수대 및 화단, 화분 등에는 계절화, 야생화를 조화롭게 배치하게 되며, 도로변 공한지, 노건, 유휴지 등 97개노선 583천㎡에는 꽃시 파종으로 관광객들에게 포토존 장소 제공 및 계절적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로 특색 있는 명품꽃길 특화거리 2개소, 3km를 조성하는 한편, 기관·단체, 마을단위 등 도민 자율 참여에 의한 꽃길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평가를 통하여 유공자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중국, 고속철로 달리다

글 박경수 (중국대사관 서기관)

빽빽한 빌딩숲 사이 바람 길을 따라 매섭게 불어오는 대륙 특유의 칼날 같은 바람에 옷깃을 여뻐던 이번 겨울의 추위가 이제는 주춤해졌다. 봄이 온다는 입춘도 지났지만 아직도 주변 그늘 곳곳의 녹지 않고 쌓인 눈을 보면 봄이 아직 멀었음을 알리는 듯하다.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날이 시작되면 고층빌딩에 눌러 살던 일상에서 벗어나 산으로 들로 싱그러운 자연을 찾아 활력을 불어넣는 여행을 떠나보자. 드넓은 황야를 달리는 적토마를 타 듯 '고속철'을 타고 말이다.



4종4횡 중국 “고속철도”를 타고

그럼 우선 중국 본토를 연결하고 있는 고속철 중 베이징~광저우 고속철도(京廣高鐵)을 한번 타보자.



4종4횡(圖) 골격 갖춘 중국 고속철 *점선 부분은 미개통

베이징~광저우 철도

항공 - 고속철 (1등석 기준, 단위 원(한화170원 상당)) 요금 비교표

구분/복경출발	스자좡	정저우	우한	창사	광저우	수속시간
항공요금	450-1200	550-900	600-1300	200-1100	800-1600	1-2시간
고속철요금	206.5	495	832.5	1038	1380	15분

작년 12월 26일 개통된 베이징~광저우 고속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철도로 2009년 말에 후베이(湖北)성의 우한(武漢)과 광저우를 잇는 武廣高鐵가 먼저 개통되었고, 지난 9월에는 허난(河南)성의 정저우(鄭州)와 우한을 잇는 鄭武高鐵가 개통된 데 이어 이번에 베이징과 스자좡(石家莊) 및 광저우를 연결함으로써 전구간이 개통되는 것으로 중국이 동서남북으로 잇는 '4종4횡' 고속철 사업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 고속철도는 시속 350km로 설계되어 있지만 초기 안전을 위해 300km와 250km로 나뉘어 운행될 예정으로 2,298km의 거리인 베이징~광저우 구간을 8시간에 주파한다. 이는 기존에 20시간보다 12시간이나 단축해 철도를 통한 1일 생활권 시대를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비행시간만 3시간 남짓, 탑승 전 및 착륙 후 수속시간을 감안하면 5, 6시간 남짓 걸리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신문망〉은 우한-베이징 항공노선은 이미 값을 80%까지 낮춰 '항공권 가격이 배추 값'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고속철이 지닌 도심접근성과 안전성, 간편한 수하물 수취 등의 장점을 따라가기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철도부는 베이징~광저우 고속철도의 열차표를 1월 20일부터 예매하기 시작했는데 가격은 일반석(2등석)이 865위안(15만5700원)으로 베이징~광저우간 항공권(1,600위



베이징 남역(圖) 대합실 자동 판매기 자동 검표대
고속철 좌석(비즈니스) 고속열차 사진

안)의 절반수준. 통상 항공권은 20% 정도 할인돼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도 36.4% 싸다. 반면 항공기의 비즈니스 클래스에 해당되는 특실(商務座)은 2,727위안(49만860원)으로 일반석보다 3.15배나 비싸다. 1등석은 1383위안(24만 8940원)이다.

모두 16개 차량이 연결돼 운행되며 1호 및 16호차는 특실 28개 좌석, 2호 및 4호차는 1등석 162개 좌석, 9호차는 식당차이며 나머지는 2등석으로 838개 좌석이 마련되어 있다.

고속철도 시대를 맞이한 중국 철도의 역사

1880년 “취차(火車-기차)” 수리공장을 건설하면서 시작된 중국 철도는 1881년 탄광에서 운반용으로 사용하던 조그만 동력장치를 개조해 증기기관차를 만들었고 암울했던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중국은 1952년부터 외국의 증기기관차를 모방해 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1956년에는 순수 기술로 처음 설계와 제작을 하게 된 증기 기관차를 생산하게 된다. 1958년에 이르러 중국은 디젤기관차와 전력을 이용한 전기기관차를 생산하면서 증기기관차는 서서히 황혼을 맞이하게 되고, 1988년 증기기관차 생산을 중단함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현재 세계 최장인 고속철도의 총 연장이 2020년에는 1만8천km로 늘어나게 되면서 중국대륙이 1일 생활권 시대로 접어들게 될 전망이다. 중국은 비록 후발주자이지만 현재 우광선(우한~광저우), 정시선(정저우~시안), 징후선(베이징~상하이), 징진선(베이징~톈진) 등 고속철도를 연이어 개통하면서 규모면에서 이미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CRH(China Railways High-speed)1~CRH6, CRH380A~CRH380D 등 고속열차를 개발하여 얼마 전 시험운행에서 세계 최고속도 575km/h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며 기술력을 입증하였다. 이는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와 공동으로 고속열차를 제작하며 기술을 이전받아 2010년 4월 12일 중국의 차세대 고속열차 CRH380시리즈를 선보인지 불과 2년만에 이룬 쾌거이다. 참고로 고속철의 역사는 1959년 4월 5일 세계 최초로 신칸센이 일본에서 착공되어, 1964년 10월 1일 마침내 개통하면서 열차속도 200km/h이상의 고속철 시대가 열렸으며, 1981년 10월에는 프랑스 TGV가 본격적으로 파리~리앙구간에서 운행되었는데 최고속도 380km/h를 기록한 바 있다.

중국, 고속철 건설의 배경

중국이 고속철도 개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은 현재 6대 발전난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6대 발전문제란 인구증가, 수자원 고갈, 에너지 부족, 토지 사막화, 환경오염 심화, 기후온난화 등을 놓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다주는 요소들이다. 수자원과 공기의 오염으로 인하여 많은 생물종류들이 멸종되었으며 인체에 해로운 바이러스들이 전파되어 가고 있다. 환경파괴를 전제로 한 맹목적인 '최고'에 대한 추구는 이미 중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부정적인 발전모델로서 하루바빠 정상적인 궤도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환경보호 차원이다. 소득의 증가와 함께 관광·물류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이동 수요 증대,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감축을 위해서도 전력(무공해)을 이용한 운송 수단의 발전이 필요하다.

둘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다. 단위 면적 당 운송 수단의 부설에 있어 철도, 특히 고속철도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자 수단이다.

셋째, 고속철의 업무 효율성이다. 기타 교통수단과의 용이한 연계성, 특히 내수 진작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 특히 중국남부 지역과 홍콩과의 연계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철도와 자동차 그리고 항공이 입체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물적 이동의 용이성과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 내수 진작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하이테크 산업으로서의 육성 가능성이다. 고속철도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며, 특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고속철도로 인한 신규 산업 및 관련 산업의 육성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

중국 정부는 대규모 철도건설 투자자금은 △은행대출(중국개발은행 올해만 1,000억위안 등) △철도채권 발행(올해 2,000억위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한도 승인) △중앙정부 재정지원(올해 당초 20억위안에서 실제로 600억위안으로 증액)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중국 철도부의 2012년 9월말 현재 자산은 4조3000억위안, 부채는 2조6600억위안으로 자산부채비율이 61.81%에 달하며, 특히 지난 1~9월 중 세후순이익이 85억4100만위안(1조5370억원)의 적자를 기록, 대규모 투자를 위한 차입확대로 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속철도 건설비용은 보통철도 건설비용의 3배 정도여서 용자 액수가 크고 채무리스크 증가 등의 문제 향후 운송수단의 공급과잉과 재정적자의 우려를 초래할 것이다. 2020년 철도부의 채무누적액은 약 3조위안에 달하며 자산 부채율이 7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고속철 요금 고가라는 점에서 주요 승객은 공금을 사용하는 사람과 부유층에 한정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저렴하고 보편적인 운송수단이 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중국의 부른 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 아시아와 유럽의 17개 국가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횡단 고속철도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동남아·러시아 등 3갈래로 나가는 노선이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를 거쳐 독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횡단 철도, 중국 남부 윈난성 쿤밍에서 출발해 베트남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를 거쳐 싱가포르로 연결되는 동남아시아 철도, 중국 북부 헤이룽장성에서 시작하여 러시아 대륙을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이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캄보디아가 철도망 복구 작업에 나서 중국과 동남아 6개국을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이 탄력을 받고 있다며 철도망이 구축되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 경제적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중국은 주변국들과 철도망을 연결하면서 영향력 확대와 함께 자원 확보 등 다목적으로 포석하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자금 지원에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지난 1월 초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한 상태이다.

중국은 고속철도로 연결할 국가들에 대해 고속철도 건설기술·장비는 물론 최대 시속 350km인 중국산 고속철도 차량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지하자원을 받고 철도 건설비용을 부담한다는 제안도 내고 협상 중이다. 새로운 고속철 무역로가 탄탄한 중국 내 고속철도망과 연결되는 그 날을 꿈꾸는 새로운 중국에 부러움을 감출 수 없다. 🌟



전국시도지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방문 간담회

지난 1월 31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당선인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 자치권 보장,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과제와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경감방안 및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른 감면분 조기보전 등 공동사항과 각 시도별 현안사업 등을 건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질적 자치권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구조직에 관한 법령 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와 중앙집권형 국가경찰제를 지방자치단체에 교통, 방범 등 현시성이 높은 민생치안업무를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유사중복 행정의 폐해를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집행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 20%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고 25%에 이르고 있는 지방세 비교세·감면 비율을 축소하는 국세-지방세 조정 및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개편, 감사원 권고에 따른 노인, 장애인, 정신 등 3개 생활시설사업의 국가사업 환원 등 교부세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중앙과 지방간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과 중앙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지사협의회장 국무회의 배석, 지역발전위원회 등 지방관련 위원회를 지방분권추진위원회로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사항으로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 비율 20% 이상 상향조정을 건의하고,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연장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의 조기 보전을 요구하였다.



전국시도지사,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방문

지난 2월6일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삼청동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및 진영 부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 지난 1월 3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간담회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수위원회측에서 윤창중 대변인, 임종훈 행정실장과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이해진 간사, 이승종 인수위원, 박동훈 전문위원 그리고 경제1분과 류성걸 간사, 경제2분과 이현재 간사, 고용복지분과 최성재 간사, 여성문화분과 모철민 간사가 배석하고 협의회 측에서는 이종범 사무총장, 윤종진 실무협의회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건의되었던 실질적 자치권 보장,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과제와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경감방안 및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른 감면분 조기보전 등 시도 공동사항과 시도별 대통령 공약사항 및 당면현안 사업 등을 중심으로 분과별로 의견을 교환하고 새 정부 정책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3 지자체 국제관계관 연찬회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3월7일부터 8일까지 제주 휴닉스아일랜드 리조트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관계관을 대상으로 「2013 지자체 국제관계관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시·도와 시·군·구가 처음 함께 한 자리로 127명이 참석하여 국제업무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협의회 역할을 소개함은 물론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으며, 사무총장 개회사, 의전교육, 지자체 사례발표 등 국제교류 실무에 필요한 특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연1회 연찬회 개최를 정례화 시켜 향후 세계화에 부응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의 국제마인드 함양 및 협의회와 지자체 간 파트너십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대학생 SNS 홍보단 1기 발대식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월27일 협의회 별관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대학생 SNS 홍보단 1기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홍보단은 쌍방향 미디어를 활용하여 대국민 소통력을 높이고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그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제고하기 위해 모집됐으며, 전국 각지의 대학생 20명이 선발됐다.

홍보단은 약 3개월 동안 시도지사협의회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한 글쓰기, 분권특위 토론회 및 행사 참여, 지방분권 성공사례 홍보 콘텐츠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행정학과 학생들과의 정보교환, 지방자치 현장 탐방 등 지방분권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국제교류 번지수 찾기 프로젝트 “지방의 국제화 컨설팅”

글 박 선 경 (교류지원부 전문위원)

지방의 국제화 컨설팅이란

“지방의 국제화 컨설팅”은 2010년부터 일회성 전문가 강의 형식을 탈피하여, 6개월 이상의 장기적 코칭을 통해 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제교류 기반이 약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국제교류업무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게 해 주는 이른바 “국제교류 번지수 찾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2010~2012년 컨설팅 현황

지난 3년간 컨설팅을 실시한 12개 자치단체의 컨설팅 이력을 분석해 본 결과 주제는 크게 “신규도시와 교류체결”과 “기존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활성화”로 나뉘었다.

연도	자치체	교류과제	비고
2010	대구 달서구	베트남 도시와 교류 체결	
	경기 화성시	해양관광우수 외국도시와 교류 체결	
	충북 영동군	이탈리아 도시와 교류 체결	
	전북 군산시	네덜란드 도시와 교류 체결	
		인도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	
2011	전남 장성군	일본 도시와 교류 체결	
	인천 연수구	스페인 도시와 교류 체결	
	경기 시흥시	호주 도시와 교류 체결	
		호주 도시와 교류 체결	
2012	경남 거창군	독일 도시와 교류 체결	※ 2012 지원
		싱가포르-거창군 학교간 교류 체결	※ 2012 지원
	인천 남동구	필리핀 도시와 교류 체결	
2012	경기 안산시	사회적기업관련 일본 도시와 교류 체결	
		일본 도시와 교류 체결	
	충북 증평군	중국 자매도시와 교류활성화	
		러시아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	
	충남 금산군	필리핀 도시와 교류 체결	
		러시아 도시와 교류 체결	
		필리핀 도시와 교류 체결	
	베트남 도시와 교류 체결		

컨설팅 사업을 통해 그간 성공적으로 추진된 국제교류 사례는 대구 달서구의 “베트남 도시와 교류체결”, 인천 남동구의 “필리핀 도시와 교류체결”, 거창군의 “싱가포르-거창군 학교간 교류체결” 등이 있다.

쌍방의 합의가 전제되는 국제교류의 특성상 ‘교류체결’이라는 목표가 1년 이내에 달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에 착안하여 2013년부터는 전년도 컨설팅 단체라 하더라도 교류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예컨대, 충북 증평군의 “필리핀 도시와 교류 체결”, 충남 금산군의 “베트남 도시와 교류 체결”은 2012년도에 교류 시작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하여 현재 상대도시와 정보교환이나 방문을 통해 교류의향을 타진 중이며, 교류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한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 및 전문가지원을 할 예정이다.

“기존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활성화”라는 주제는 “신규 교류체결”보다는 수요가 적었는데, 주로 교류경험이 비교적 풍부한 자치단체에서 소강상태에 있는 교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류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다. 전북 군산시의 경우, 2004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나 2010년초까지 소강상태에 있던 인도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인도 자매도시와 교류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10년에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2012년에는 자매도시를 방문하여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교류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한 바 있다.

그런데 컨설팅을 통해 꼭 교류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자치단체에서 상대국 도시와 교류의사가 있었지만, 교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목표가 수정되거나, 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이 수정되어 교류시도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고, 상대 자치단체에서 교류의사가 없어 더 이상 교류를 추진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종합컨대 컨설팅은 ‘교류체결 성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교류에 대한 장기적 안목으로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와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교류대상국의 교류여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교류도시에 대한 정보를 수집·검토하며, 해당지역 전문가를 발굴하여 교류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2013년 컨설팅 추진계획

2013년도에는 2월에 컨설팅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8개 자치단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3~4월에는 자치단체를 개별 방문

하여 사전인터뷰를 실시하고 2013년도 컨설팅 대상 단체를 최종 선정한다. 4월부터 10월까지의 본격적인 컨설팅 기간으로, 각각의 컨설팅 주제에 적합한 전문가를 물색하고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자치단체가 설정한 교류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컨설팅은 자치단체별로 10~11월에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 2013 컨설팅 신청 자치단체 : 대구 서구, 경기 부천시, 경기 안양시, 강원 양양군, 전북 임실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영양군, 경북 울진군

[2013 컨설팅 추진 흐름도]



한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컨설팅을 통해 수집된 전문가 발표자료는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정보DB의 “국제화 교육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봄 내음 가득한 우리고장 특산물

글 김 영 빈 (푸드스타일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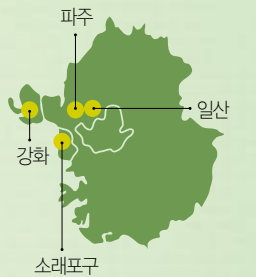


지루할 만큼 길었던 겨울이 끝이 났다. 겨울과의 이별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봄을 맞으면 누구랄 것 없이 몸이 나른하고 졸음이 쏟아지고 입맛도 없어진다. 억지로 먹은 점심은 춘곤증을 몰고 온다. 봄이 오면 우리의 신체는 겨울의 동면기에서 봄의 활동기로 들어간다. 그로 인해 다량의 비타민과 무기질을 필요로 하게 되어 부족한 영양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른함, 춘곤증, 피로와 무기력증을 호소하게 된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입춘오신반(立春五辛盤)이라 하여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면 움파, 산갓, 당귀 싹, 미나리 싹, 무싹 등의 매운 맛의 새로운 봄채소들을 새콤하게 무쳐 먹고 오장 육부에 비타민과 무기질 등의 영양을 공급해 주었다. 언 땅과 물을 녹이고 산과 들, 바다에 지천으로 쏟아져 나오는 나물과 해산물들은 무기질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쓴 맛, 신 맛 등을 가지고 있어 겨우내 무뎠던 머리와 내장기관을 자극하여 입맛을 찾아주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는 봄의 보약이라 할 수 있다. 이 봄의 보약들은 산해진미를 방불케 할 정도로 다양한 맛과 모습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산재해 있다.

나른한 입맛을 깨우는 중부의 풍미

서울과 가장 가까운 경기도에는 파주의 물숙, 일산의 햇열무, 소래포구의 꽃게, 강화의 썩이 유명하다. 물숙은 습지나 냇가에서 자라는 다년생의 나물로 잎과 줄기를 버리고 뿌리만 다듬어 먹는데 일반 썩보다 씹실한 맛과 향이 좋아 봄 철 잃어버린 미각을 돋우는데 한 몫을 한다. 열무는 일년 내내 재배하지만 잎이 가장 여리고 많이 달아지는 봄 열무가 제일이다. 봄 열무는 여러서 생으로 똑똑 끊어 비빔밥이나 생채를 해 먹으면 향이 좋다. 소래포구는 예로부터 서울, 경기 일대의 해산물 공급처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봄과 함께 찾아오는 살이 실한 봄 암게는 실로 여러 사람의 발길을 바닷가로 돌리는 강력한 매력의 맛을 지녔다. 강화도는 해풍 맞고 자란 약썩이 유명하다. 썩이 옷 자란 향과 효능이 진해진 것이 약썩인데 약썩도 약썩이지만 이른 봄 해풍의 향기를 간직한 강화도의 향내 좋은 약썩은 봄 철 입맛 살리는 국으로, 향기 좋은 떡으로 변신하여 우리의 입맛을 살려 준다.



충청도의 봄은 서해 포구의 풍년 인사와 함께 온다. 당진의 간재미, 무창포의 쭈꾸미, 태안의 바지락, 과산의 다슬기 등이 대표적이다. 간재미는 이른 봄부터 6월까지가 살이 실한데 6월 이후의 간재미는 산란기가 지나 살이 늘어서 맛이 없다. 간재미는 회로 떠서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으면 집나갔던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마력을 지녔다. 머릿속에 보석 같은 알이 꽉 찬 봄 쭈꾸미는 보는 것만으로도 생명력이 넘친다. 조리법과 먹는 법이 다양하지 않은 것은 쭈꾸미가 워낙 몸집이 작기 때문인데 알 찬 쭈꾸미는 낙지보다 달고 문어보다 찰지다.



봄이면 서해에는 무창포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쭈꾸미 축제를 하니 가족 나들이 코스로 한 번 쯤 발길을 돌려 봄 직하다. 바지락은 일년 내내 볼 수 있지만 봄철에 살이 가장 실하다. 맛도 달기가 최고이다. 태안의 펠에서 나고 자란 바지락은 칼국수로 유명하지만 이외에도 무침, 회, 볶음, 전, 튀김은 갖은 요리로 변신해도 누가 뭐랄 것 없는 별미 먹을거리가 된다. 다슬기는 지방에 따라 우렁쉥이, 고동, 울갱이, 고디, 보말 등으로 불리는데, 물이 많은 개울가의 바위에 붙어 살아 다슬기가 사는 곳은 수질이 좋다는 반증이 된다. 다슬기는 시력보호, 간기능 개선, 숙취해소에 효능이 있어 웬만한 주당들은 눈독을 들이는 봄 먹을거리이다.

강원도는 인제의 더덕황태, 정선의 곤드레나물, 양구의 두릅, 곰취, 속초의 가지미 등이 유명하다. 겨우내 칼바람에 얼얼라 살이 더덕처럼 일어나는 황태는 맛도 맛있지만 봄 철 피로회복과 간기능 개선에 효능이 있어 더욱 좋





다. 정선의 5일장에 나가면 여러 산나물을 볼 수 있다. 그 중 일미는 곤드레 만드레 봄 바람에 머릿결 날리며 자란 곤드레가 아닐까 싶다.

곤드레는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지만 곤드레 나물밥을 하여 먹으면 그 풍미가 더욱 좋다. 양구는 청청한 자연 환경으로 각종 농산물의 보고이지만 봄의 제왕 두릅과 곰취 등의 산나물이 더욱 유명하다. 씹쌀한 향기가 있는 두릅은 살짝 데쳐 초고추장만 찍어 먹어도 더 이상의 요리가 필요 없다. 곰 발바닥을 담은 곰취는 어린 잎에 밥 한 술, 삼장 한 점 올려 먹으면 강원도의 봄 향기를 한 입에 만끽할 수 있다. 설악산의 눈이 녹아 동해로 흘러들면 동해 바다의 봄이 온다고 동해 어부들은 말한다. 이 동해 바닷바람과 함께 오는 봄 가자미는 살이 쫄득하고 살이 연해 싱싱한 횡감으로 제일이다.

입안 가득 퍼지는 남도의 푸른 향

경상도는 남해의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올라온 통영 도다리, 청도미나리, 김해의 참죽, 하동의 녹차 등이 유명하다. 봄 제철 도다리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썩과 함께 국을 끓여 도다리 썩국을 끓여 먹어야 경남에서 봄을 냈다 말할 수 있다. 청도의 미나리는 봄과 함께 살이 썩는다.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 음지리, 평양지, 상리 일대를 한재라고 부르는데 이 곳은 남산과 화악산 사이의 계곡을 따라 형성된 마을들로 전국에서 유명한 한재 미나리의 산지이다. 봄 미나리는 겨우내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해독하는 디톡스 효과도 뛰어나 먹으면 미남 미녀가 된다. 원래는 가죽이라 불리지만 스님들이 먼저 먹기 시작하여 가중나물로도 불리는 이 나물은 참죽나물만 식용으로 먹는다. 향이 좋고 씹는 맛이 좋아 나물, 전, 부침, 장아찌 등에 고르게 사용할 수 있다. 하동은 골골이 녹차 나무가 장관을 이룬 녹차의 산지이다. 하얀 벚꽃이 바람에 날려 지면 녹차의 어린 잎이 올라오는데 곡우 전 후로 올라오는 어린 잎을 최고로 치며 우전(雨前)이라 부른다.

맛의 고장 전라도는 충청도와 서해를 경상도와 남해를 나누고 있어 많은 봄 특산물을 나누어 가지지만 벌교의 꼬막과 고창의 보리순, 구례의 냉이, 달래 등의 나물, 담양의 죽순, 지리산의 고로쇠 수액 등이 유명하다.

끝없이 펼쳐진 벌교 개펄의 영양의 가득 간직한 꼬막류는 혈액의 성분이 헤모글로빈이 풍부해 피가 빨간 색을 띠는데 빈혈이나 혈액순화에 도움을 준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꼬막은 벌교 지방의 명실공히 특산품으로 봄 철 벌교로 나들이를 가면 꼬막만으로 차려진 한정식 상차림을 받아 볼 수 있으니 과히 그 조리법과 맛을 상상하고도 남겠다. 고창의 청보리순은 고창의 특산품 장만 큼이나 유명하다. 언 땅을 뚫고 올라온 초록의 생명력은 또 다른 특산품 흥어애와 함께 끓



여져 보리순애탕으로 이름을 날린다. 구례는 냉이, 달래 등의 소소한 나물거리들을 봄에 지천으로 볼 수 있다. 산과 평지가 조화를 이룬 구례의 특성상 타 지방보다 향 좋고 영양가 풍부한 봄 나물을 맛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선비의 고장 담양은 봄이면 대 숲에서 죽순자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죽순이 정신 없이 올라온다고 한다. 죽순은 봄의 별미이긴 하지만 껍질을 벗기고 삶아 아린 맛을 빼는 과정 등의 어려운 손질법을 거쳐야 제대로 된 죽순 맛을 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다. 5월만 넘어가면 죽순이 역세어지고 쓴 맛이 생겨 먹을 수 없으므로 발 빠른 미식가라면 죽순소식과 함께 잔 걸음으로 서둘러야 제철 햇 죽순의 향취를 느낄 수 있다. 봄 기운이 시작되는 2월 중순부터 4월 경까지 채취되는 고로쇠 수액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특유의 맛과 향이 있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열처리를 하지 않아 봄 잠깐 맛 볼 수 있는 별미 식품이다.

동해 바다에서 봄 향기를 가득 풍겨내는 울릉도는 햇고사리와 명이나물, 부지갱이나 물 등이 유명하다. 육지와 떨어져 있어 울릉도 만의 자생 식물로 이루어진 독특한 봄 나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해마다 4월이면 울릉도나물 축제를 열어 그 맛과 향기를 널리 알리고 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햇고사리는 나물이나 볶음으로도 맛있지만 봄 조기와 함께 조리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명이나물은 잎이 여러 장이짜나 김치로 담가 오래 두고 먹는데 고기요리에 함께 싸 먹으면 고기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소화를 도와 준다. 부지갱이 나물은 독특한 맛과 향이 일품인데 이른 봄 어린 것을 무쳐 먹거나 말린 것을 불려 무쳐 먹는다. 울릉도와 독도는 마음 먹고 나서도 일년 중 볼 수 있는 확률이 그리 높지 않는 신비의 섬이다. 울릉도의 봄 정취를 마음껏 누리고 싶다면 기상상태와 배편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한국에서 가장 이국적인 정취를 간직한 제주도의 봄에는 유채나물과 모자반, 톳, 미역 등이 유명하다. 씹을 때 툭툭 터지는 톳은 돼지를 푹 고와 만든 육수에 끓인 모자반 국, 어린 미역으로 끓인 부드러운 미역새국과 함께 봄에 국으로 끓여 먹는 대표적인 해조류이다. 봄 제주도의 해초들은 칼슘이 풍부해 어린이들의 성장이나 여성들의 골다공증에 좋고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되는 알긴산이 풍부해 황사가 불어오는 봄 철에 더욱 좋다. 노오란 꽃이 피어 절경을 이루는 유채는 꽃이 피기 전에 채취해 잎을 나물로 먹는다. 하루나라고도 부르는데 된장을 풀어 국을 끓이기도 하고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고 전을 부쳐 먹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봄은 맛있는 먹을거리와 함께 시작된다. 여기 소개한 여러 가지 봄 특산품과 함께 겨우내 텅텅했던 목은 입맛을 상큼한 봄 입맛으로 바꾸어 보자. 🍵



문심(文心)의 땅, 해남

글 하린 (河潸/시인)

전남 영광 출생.
1998년 광주매일 신춘문예 시 당선
2008년 《시인세계》신인상으로 문단활동 시작
시집 '야구공을 던지는 몇 가지 방식'
2011년 청마문학상 신인상 수상



해남(海南)은 전남 서남부에 위치한 군으로 동으로 강진 북쪽으로 영암과 인접에 있으면서 서쪽과 남쪽에 바다를 끼고 있는 전남에서 가장 넓은 면적이 있는 곳이다. 해양성 기후로 따뜻한 편이고 농업과 어업이 모두 발달했다. 이런 지형적 특징 때문일까. 해남에는 볼거리, 먹을거리, 느낄거리가 아주 풍부하다.

거기마다 문인들까지 많이 배출되어 한국문학의 산실로 인정받고 있다. 살아 있는 문인들을 제외하고도 작고한 시인들이 유명하다. 대표적인 시인으로는 고산 윤선도와 김남주 시인, 고정희 시인이 있다. 이 세 명의 시인은 단순히 해남 출신이라는 것 말고도 또 다른 동질성이 갖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현실 인식이 투철한 시인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500년이 넘는

우람한 은행나무에

매료되어 먼저

은행나무 아래에 선다.

우람하고 듬직한 자태에

'아!'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고산 윤선도는 당쟁이 심할 때 남인 출신 문인이었는데, 소신껏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아 유배지를 전전했고, 김남주 시인과 고정희 시인은 독재와 불합리에 굴복하지 않았다. 필자는 이 세 사람을 만나러 매년 해남에 간다.

고산 윤선도를 만나기 위해서 찾은 곳은 녹우당과 고산윤선도유물전시관이다. 녹우당(綠雨堂)은 고산 윤선도가 나고 자란 곳으로 후일의 해남 윤씨의 종가가 되었다. 윤선도의 고조부 윤효정(호는 어초은(魚樵隱), 1476 ~ 1543)이 해남군 연동(蓮洞)에 살터를 정하면서 지은 15세기 중엽의 건물이다. 효종의 어린 시절 사부였던 윤선도를 위해 하사한 수원에 있는 사랑채를 영원히 기념하고자, 해상으로 일일이 운송한 후 이전하여, 처음에는 그 사랑채만 녹우당이라고 불렀는데, 이후 안채를 다 합쳐서 오늘날까지 녹우당(綠雨堂)이라고 부른다.

녹우당으로 가는 길목엔 고산윤선도유물전시관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500년이 넘는 우람한 은행나무에 매료되어 먼저 은행나무 아래에 선다. 우람하고 듬직한 자태에 '아!'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눈을 감고 우거진 그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어린 윤선도를 생각했다. 뚝뚝뚝뚝한 눈망울의 소년이 지나가는 바람과 날아가는 새의 마음을 읽으며 시조도 한 수 읊고 있다.

어린 윤선도를 따라 녹우당으로 들어가면 고풍스러운 기와집 지붕 아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綠雨堂' 현판이 보인다. 그리고 따사로운 인상의 집 전체가 보인다. 명문가의 고택이라고 하면 대부분 웅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연친화적인 구조로 주변의 산과 나무, 그리고 햇빛과 어우러져 친근함마저 감긴다. 윤선도의 고조부 어초은의 묘와 제각인 추원당 등을 보고 나서 천연기념물 제 241호인 뒷산의 비자나무숲까지 보고 나면 절로 '오우가(五友歌)가 떠오른다. 비록 녹우당에서 그 시조가 창작되진 않았지만(해남 금쇄동이 창작된 곳) 벗으로 삼았던 다섯 가지(水(水)· 석(石)· 송(松)· 죽(竹)· 월(月))을 충분히 다 느낄 수 있다. 녹우당 일대를 다 보고 나서 고산윤선도유물전시관으로 가면 윤선도와 그의 가계에 관련된 유물 4천 600점을 볼 수 있다. 눈에 띄이는 인물이 윤선도의 증손인 공재 윤두서인데, 그의 유명한 자화상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조선시대 미술의 섬세함을 맛볼 수 있다.

500년 전의 시인을 만나고 다음으로 찾아 간 곳은 수 십 년 전에 활동했던 김남주 시인(金南柱, 1946년~1994년)과 고정희 시인(高靜熙, 1948~1991)의 생가다. 두 시인은 닳은 점이 많다. 가까운 마을에서 두 살 터울로 태어나서 암울한 독재자 시절을 지냈고 시인이면서 사회운동가로 모두 활동했다. 그리고 작고한 시기까지 비슷했다.



흥분되고 격양된다. 이런 감정을 다스리기에 좋은 곳이 미황사(美黃寺)다. 미황사는 불교의 해로유입설을 뒷받침하는 고찰로 대웅전은 보물 제947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면서 규모나 정교함에 있어서 매우 훌륭한 건물이다. 신라시대 의조화상이 창건했는데, 소가 등에 불상과 경전을 싣고 가다가 머무는 곳에 절을 지었다고 한다. 소의 울음소리가 아름답고 소를 싣고 온 배의 주인인 인도 국왕 금의인(金衣人)이 황금으로 번쩍거리던 것을 기리기 위해 미황사(美黃寺)라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다 보면 미황사를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높이 489m의 달마산이 한 눈에 들어온다. 기암절벽의 조화가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워 처음 보는 이들은 한동안 눈을 땔 수가 없다. 한 마디로 생생하게 그려진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하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달마산의 기운이 '나'를 향해 내려오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김남주 생각나 고정희 생각에서 만났던 치열한 현실 세계에 대한 감정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기에 충분한 풍경이다. 미황사는 같은 지역에 있는 대흥사에 비해 웅장하거나 화려하진 않다. 하지만 수려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그런 아름다운 절이 아직까지 입장권을 받고 있지 않은 점은 놀라웠다. 아마도 현실에 지친 사람들을 포근히 감싸고 싶은 달마산과 미황사의 마음은 아닐까…….

녹우당에서 고풍스런 시조의 멋을 느끼고 김남주 생각, 고정희 생각에서 현실의 아픔을 만진 후, 미황사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무(無)의 아름다움으로 정화시켰다. 이제 마지막으로 '땅 끝'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북위 34도 17분 2초, 국토의 최남단이라는 상징성 때문일까 관광객이 꽤 있다.

그 시인은 일부러 모노레일을 타지 않고
직접 걸어서 올라갔다.
바람의 살결과 바다의 냄새를 호흡하면서
한발 한발 옮기려는 의도였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저것이 온몸으로 시를 쓰는 시인의 마음이 아닐까.

땅끝으로 오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노레일, 하나는 도보다. 필자는 도보를 권하고 싶다. 해발 1562m의 사자봉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 천천히 걸으면서 바다와 섬을 생생하게 음미하면 좋겠다. 한번은 시각장애인 시인과 동행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시인은 일부러 모노레일을 타지 않고 직접 걸어서 올라갔다. 바람의 살결과 바다의 냄새를 호흡하면서 한발 한발 옮기려는 의도였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저것이 온몸으로 시를 쓰는 시인의 마음이 아닐까.

정상에 오르면 넓은 바다와 바다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섬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바다가 섬을 낳았는지 섬이 바다를 낳았는지 모를 정도로 바다와 섬은 지용동체처럼 연결되어 있다. 다도해의 절경을 보자 하루 동안 만나고 온 세 시인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그들도 분명 저 바다와 섬을 보았을 거고 현재의 '나'도 같은 곳을 보고 있다. '나'도 그들만큼 치열하게 쓸 수 있을까, 그래 한번 해보자, 반문과 다짐을 동시에 하며 '땅끝'을 경쾌하게 내려왔다. 🍊



김남주 시인 생각(해남군 삼산면 봉학리)를 먼저 찾아갔다. 김남주 시인은 전통적인 농가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시인이면서 시민·사회운동가로 활동했다. 자신 스스로 시인이라고 불리기보다 민주화를 위해 싸운 '전사'로 불리길 원했기에, 그의 생각을 찾는 마음은 경건하다. 1972년 유신헌법이 선포되자 이강(李綱) 등과 전국 최초로 반(反)유신 지하신문인 '함성'을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려다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고 대학에서 제적당했고, 그 이후에도 인혁당 사건, 남민전 사건으로 투옥되었으며, 민청학련 사건의 관련자로 지목되어 고초를 겪었다. 1980년 남민전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15년 형을 언도 받고 수감됐다가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특별 지시로 석방되었으나, 1994년 최장암으로 사망하였다.

10여간 감옥 생활에서도 250여 편에 달하는 시를 창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문학의 역할이란 이런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아담한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온다. 누구나 한번쯤 보았을 친근한 사골집이다. 시비와 김남주 시인의 흉상 등이 없었다면 그냥 친척집을 방문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생각을 찬찬히 살펴보고 나서 집 위쪽에 올라가니 독방(감옥)이 만들어져 있다. 난생 처음 보는 독방, 그 안에 들어가서 동료에게 문을 닫아 보라고 했다. '꽁' 캄캄한 어둠 속에 혼자 대동댕이쳐지자 무섭게 두려움이 밀려온다. 이 두려운 어둠 속에서 김남주 시인은 멈추지 않고 독재자와 싸우는 시를 썼던 것이다. 절로 감탄스러웠다.

놀라움과 흥분을 뒤로 한 채 고정희 생각(해남군 삼산면 송정리)로 간다. 고정희 생각는 비교적 넓은 들판을 지나가면 나온다. 대문 안쪽에 들어서면 고정희 시인이 김남주 시인 보다는 좀 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을 거란 인상을 받는다. 마당이 넓고 규모가 조금 더 큰 집에 거실도 안락하게 자리하고 있다. 집안의 분위기도 따스롭고 여유로워 보인다. 뭐니 뭐니 해도 거실을 가득 채운 오래된 서적들이 눈에 뜨인다. 빛바랜 표지의 책들을 보니 고정희 시인의 독서량이 짐작된다.

고정희 시인은 5남 3녀 가운데 장녀로 태어나서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한 뒤 1975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해 시인이 되었다. 그 후 14년 동안 무려 열한 권의 시집을 냈으니 평균 잡아 매해 한권씩 시집을 펴낸 셈이다. 성실함과 다산적인 측면이 강한 시인으로 보인다. 기독교적 구원의 세계와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고통과 절규가 묻어나는 시도 있지만 4·19, 광주항쟁 같은 참담한 현대사에서 비롯된 사회의식과 민주화예의 열망이 묻어나는 시도 있다. 그리고 여성을 억압해 온 역사와 현실에 대한 분노와 여성해방에의 의지가 묻어나는 페미니즘적인 시도 있다. 이런 다양한 특징 때문에 지금도 고정희 시인의 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페미니즘(여성주의)적인 특징은 여성시의 발전에 큰 축을 차지하는 걸로 평가받고 있다.

김남주 시인과 고정희 시인을 만나면 불합리한 과거사가 떠올라

Forrest,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s.
You never know what you are going to get. Forrest Gump(1994)



"포레스트, 인생은 초콜릿상자와 같아서 무엇을 집어들지 아무도 모른다"



"인생은 정말 쓴가 봐요, 무엇을 집어들어도 초콜릿이 다 써요"

여신의 축복 속에서 대자연의 숨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세계

동양적 기쁨과 희망을 화사하고 온후한 나비의 몸짓과 산비로운 꽃들의 향연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바탕화면에 영적감흥을 안고 은유적 형상으로 묘사된 정의의 여신상은 인간사회의 평화로운 소통과 질서의 조화를 자연세계의 나비가 그러한 것처럼 대변하고 있다.

인간의 삶 속에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모든 이의 염원이 참 자유의 의지를 실현시켜 주는 여신의 축복 속에서 대자연의 숨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세계를 보여주고 싶다.



작품명 축제 (2012) 크기 116.8x91cm 재료 한지+분채



박 석 손

개원전 20회 (서울, 대구, 군산, 예쿠이들 등), MANF 서울 국제 아트페어 (예술의 전당 미술관), 한국화 그 전통과 정신전 (롯데미술관, 서울)
당대 한·중 대표작가 연합전 (시중문화회관 전시실), 한국 현대 미술제 (예술의 전당 미술관), 뉴욕 아트페어 (뉴욕 컨벤션센터)
PJAF 한국·스페인 현대 미술제 (일라가 미술관, 스페인), 前 한국 미술협회 이사장 역임, 現 국립군산대학교 예술대학 교수